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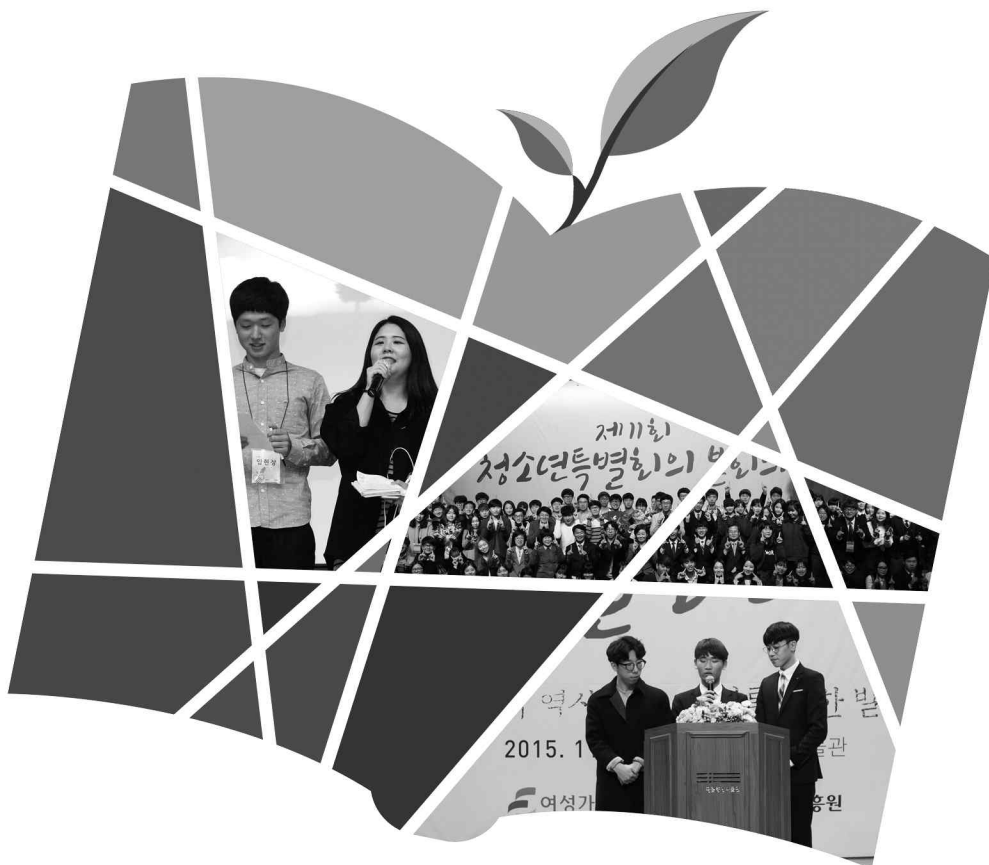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결과보고서

2015. 12.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결과보고서

2015. 12.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 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착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제 1 장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

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배경 및 경과 07
2.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경과 08
3.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체계 09
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10

제 2 장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운영

1.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13
2.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15
3.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워크숍 16
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 17
5.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19

제 3 장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과제

1. 정책과제 23
2. 정책과제 정부 검토의견 26

제 4 장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평가

1.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평가회의 53

붙임 자료

-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과제 추진 현황 모니터링 57

제1장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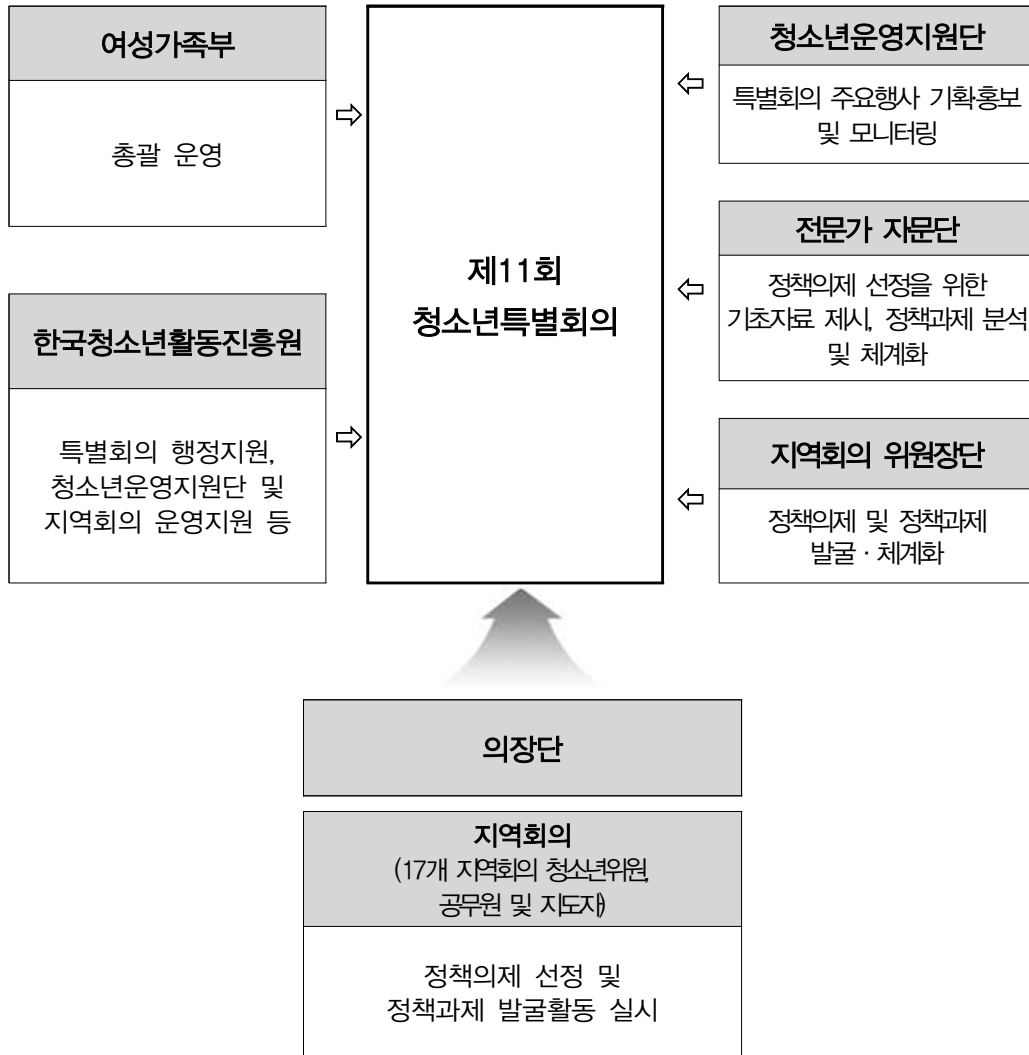
청소년특별회의 추진배경 및 경과

- ◎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 UN, EU 등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 과제로 선언, 헌장 등 공포
- ◎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전국 단위의 청소년 참여 기구 설치 요구 증대
 - 이에,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추진, 점검하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여론 형성
- ◎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15조에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2004년 시범사업 이후 매년 개최
 -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5. 12. 22)
 - 정책의제 :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 6대 영역 20개 과제 제안
 -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6. 10. 27)
 - 정책의제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7. 11. 2)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4개 영역 18개 과제 제안
 -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08. 11. 21)
 - 정책의제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 제5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 12)
 - 정책의제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0. 11. 26)
 - 정책의제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1. 11. 18)
 - 정책의제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2. 11. 23)
 - 정책의제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3개 영역 89개 과제 제안
 -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3. 11. 22)
 - 정책의제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개최(2014. 11. 21)
 - 정책의제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경과

- ◎ '15. 1.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기본계획 수립
- ◎ '15. 2. 2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담당 지도자 워크숍
- ◎ '15. 3. 30. 지역회의 구성
- ◎ '15. 4. 7. 청소년운영지원단 구성
- ◎ '15. 4. 27. ~ 30.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안) 투표
 -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정책의제 후보군 선정
 출범식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 '15. 5. 8. ~ 9. - 정책의제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의장단, 중앙청소년대변인 선출
- ◎ '15. 6. ~ 7.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 활동
- ◎ '15. 7. 26. ~ 27.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워크숍
 - 정책과제 공유 및 체계화
- ◎ '15. 8.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 활동
- ◎ '15. 8. 2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집중회의
- ◎ '15. 9. 19. ~ 20.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도출
- ◎ '15. 10. 정책과제 관계부처 협의
- ◎ '15. 10.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 ◎ '15. 11. 20.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국립중앙박물관)
- ◎ '15. 12. 11.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평가회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체계



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 대 상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대표 3명(선출직)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운영지원단

- 대 상 : 청소년특별회의 기참가자 중 공개선발 청소년 9명
- 기 능 : 주요 행사 기획 및 홍보,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 대 상 : 지역회의 추천 청소년 17명
- 기 능 : 정책의제에 따른 정책과제 집중 연구 및 체계화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 기 능 : 정책의제 선정 및 실천활동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실시
- 구 성
 - 교급별

구분	청소년					
	초	중	고	대	기타	소계
남	2	21	66	18	4	111
여	0	17	78	11	3	109
총계	2	38	144	29	7	220

※ 31명 해촉, 최종 활동자 220명

- 지역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청소년	18	13	14	12	6	15	13	11	20	11	15	13	15	15	11	10	8	220
남	14	6	3	7	3	7	6	8	9	4	6	6	6	8	8	4	6	111
여	4	7	11	5	3	8	7	3	11	7	9	7	9	7	3	6	2	109

제2장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1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

□ 목 적

- 청소년특별회의 목적 및 추진방향 이해
- 정책의제 선정 및 정책과제 발굴 활동 방안 모색
-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간 네트워킹 구성 및 자긍심, 명예심 배양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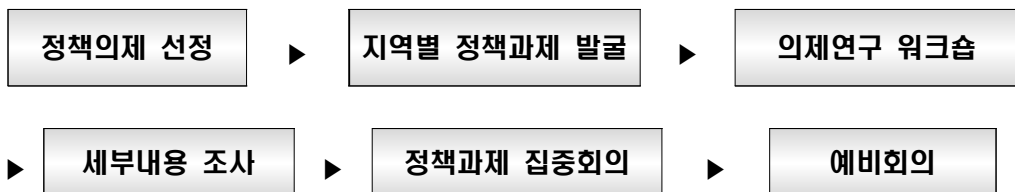
- 기 간 : 2015. 5. 8.(금)~9.(토)
- 장 소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인 원 : 총 258명
- 주요내용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선언,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 보고
 - 정책의제 선정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의장단 및 중앙청소년대변인 선출

□ 정책의제 선정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정책과제 발굴 과정



□ 진행 일정표

시 간	세 부 내 용		
1일차 <5.8(금)>			
12:30-13:20	○ 참가자 등록 및 행사 안내		
13:20-14:00	○ 안전교육, 성폭력 예방		
14:00-15:00	○ 의제선정 방법과 정책과제 발굴강의		
15:00-16:00	○ 개회식		
16:00-17:00	○ 예비 정책의제 소개 및 발표		
17:00-17:30	○ 정책의제 투표 및 선정		
17:30-19:00	○ 저녁식사		
19:00-20:00	○ 대표 정책과제 발굴 분임토의		
20:00-21:30	○ 정책과제 발표 및 피드백		
2일차 < 5.9(토)>			
09:30-11:00	○ 의장단, 중앙 청소년대변인 선출		
11:00-12:00	역대위원과의 만남	의제연구팀 교육	모니터링 교육
11:00-12:00	○ 폐회식		

2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지역회의

지역	정책과제
서울	다시 보는 역사, 새로 보는 미래
부산	청소년참여를 통한 역사교육
대구	청소년들이 발로 뛴다. ‘청소년역사증인단’
	바른 역사 인식의 첫 걸음
	청소년 역사 교육망, 역사의 깊이를 더하다.
인천	3D 역사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역사페스티벌
	체험을 통해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교육
	KHY(Korea History Youth)
광주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역사
대전	우리 역사 알리기
	교육과정 속에서 여행과 체험을 통해 느끼는 역사
	역사의 달을 지정하여 체험활동 활성화
울산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향상 및 교육확대
세종	청소년이 생각하고 참여하고 알리는 올바른 역사
경기	‘역사의 날’ 지정
	광고를 통한 역사의식 함양
	역사 관련 영상, 웹툰 제공
강원	학교내외의 역사 활동을 통한 청소년 역사의식 수준 및 지식수준 함양
충북	우리역사, 보고, 듣고 있니?
	우리가 만들어 가는 청소년 교과서 또는 수업들
	우리의 가족 북한, 못 보지만 이해하자
	역사, 우리 손으로 지켜요
충남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만드는 청소년
전북	청소년 역사의식 향상을 위한 청소년활동정책
	체험적 역사교육 확대와 올바른 역사교육 강화
전남	발로 뛰는 역사교육
경북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역사
경남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 강화
제주	청소년 지역 역사의식 함양
	청소년이 바라보는 역사의 창
	한국사 수업개선 및 한국사 프로그램 개설

3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워크숍

□ 개 요

- 기 간 : 2015. 7. 26.(일) ~ 27.(월)
- 장 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참 석 자 : 총 32명
 - 의장단 3명, 지역회의 위원장 16명, 청소년운영지원단 5명
 - 전문가 및 관계자 8명

□ 주요내용

- 2015년 정책과제 발굴 방향 논의
- 지역별 발굴 정책과제 발표(공유), 분석·체계화

□ 추진흐름



□ 추진결과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3개 영역, 8개 정책과제)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주제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1. 교육	2. 활동	3. 홍보
1-1. 역사 공교육 내실화 1-2. 역사 인재 양성지원 강화 1-3. 역사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확대	2-1.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 활성화 2-2. 청소년 역사 이해 프로그램 기반 조성	3-1. 이벤트를 이용한 역사 홍보 3-2. 청소년으로 참여하는 역사 홍보 3-3. 미디어를 이용한 역사 홍보

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

□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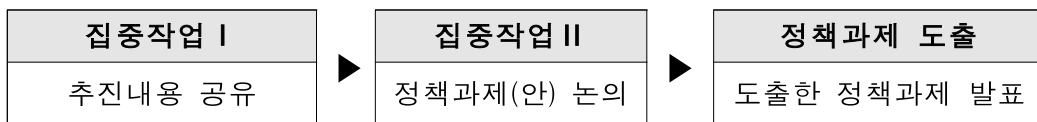
- 지역회의 별 발굴한 정책과제 공유 및 집중토론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 정책과제 도출

□ 개 요

- 기 간 : 2015. 9. 11.(금) ~ 12.(토)
- 장 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참 석 자 : 85명
 - 의장단 2명, 지역위원 43명, 중앙청소년대변인 2명
 - 발표자 3명, 청소년운영지원단 8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명
 - 지도자 16명,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2명, 진흥원 6명

□ 주요내용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최종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
-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정책과제 분석 및 체계화



□ 추진결과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도출 (23개)

□ 진행 일정표

시 간	내 용
1일차 <9.11>	
13:00~13:45	○ 올바른 역사이해를 위한 체험활동
13:45~14:00	○ 일정 안내
14:00~14:40	○ 개회식
14:40~15:00	○ 시설이용안내 및 안전교육
15:00~15:15	○ 성교육
15:15~16:00	○ 실천과제 추진 논의 I
16:00~18:00	○ 집중작업 I : 정책과제 내용 공유
18:00~19:00	○ 저녁식사
19:00~21:00	○ 집중작업 II : 정책과제 체계화 논의
21:00~	○ 피드백 및 취침
2일차 <7.27>	
08:00~09:30	○ 아침식사 및 집결
09:30~10:00	○ 결과 공유 및 최종 정책과제 발표, 확정
10:00~10:30	○ 청소년정책제안 참여기회확대 회의 (정부 3.0)
10:30~11:00	○ 실천과제 논의 II
11:00~11:30	○ 폐회식
11:30~	○ 점심식사 및 귀가

6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 개 요

- 일 자 : 2014. 11. 20(금)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 참 석 : 290명
 - 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석병 사무처장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서재범 회장, 센터장 2명
 - 청소년 위원 204명, 청소년운영지원단 9명, 일반청소년 32명 지도자 16명
 - 여성가족부 5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8명, 학부교, 전문가 및 공무원 11명

○ 주요내용

- 2015년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제안 및 정부부처 답변

※정책의제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3개 분야 총 23개 정책과제 건의

분야	부 문	과제 수	수 용		수용 불가
			수용	부분 수용	
	계	23	6	14	3
교육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4		3	1
	역사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확대	3		2	1
활동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 활성화	5	2	3	
	청소년 역사이해 프로그램 기반 조성	4	3	1	
홍보	이벤트를 이용한 역사 홍보	3	1	1	1
	역사홍보의 다각화	4		4	

- 2014년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 이행여부 발표
- 지역회의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실천과제 활동 (통일염원 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 진행 일정표

구분	시간	세 부 내 용
사전행사	12:30~14:00	• 청소년 역사 특강
본회의	14:00~14:45 (1부)	• 내빈 입장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영상 상영
		• 개회사
		• 격려말씀
		• 건의문 낭독 및 전달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우수사례 시상
		• 기념촬영
	14:55~16:00 (2부)	• '14년 정책과제 이행여부 발표
		• '15년 주요 정책과제 발표
		•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우수사례 발표
		• 역사글짓기 공모 시상
		• 폐회선언
실천과제	16:00~17:00	• '통일염원 선언문' 낭독 • 국립중앙박물관 탐방

제3장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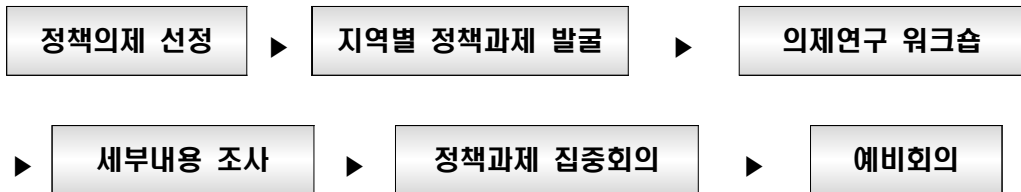


1 정책과제

1 정책의제 선정

□ 정책의제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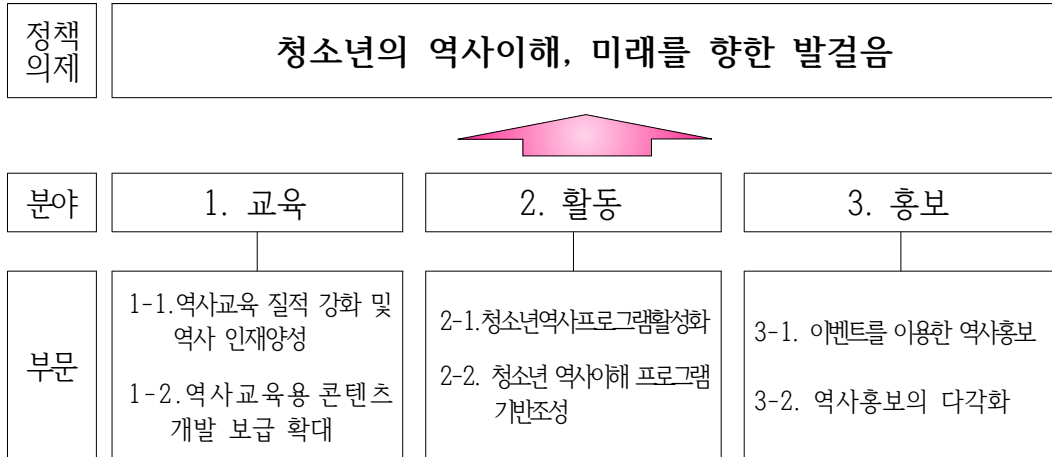
□ 정책과제 발굴 과정



- 2015. 5. 8.~9.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선정
- 2015. 5. ~7. 지역별 정책과제 발굴
- 2015. 7. 26.~27. 의제연구워크숍
 - 지역별 제안 정책과제 공유 및 체계화
- 2015. 7. ~8. 정책과제 세부내용 조사
- 2015. 8. 24. 정책과제 집중회의
 - 지역별 조사내용을 토대로 정책과제 분석 및 정리
- 2015. 9. 11.~12. 예비회의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정책과제 도출
- 2015. 11. 20. 본회의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건의

2 정책과제 구성·체계

○ 정책과제 구성 : 총 3개 분야, 6개 부문, 23개 정책과제



○ 정책과제 현황

분야	정책과제	소관부처	수용여부
1. 교육	1-1.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1-1-1. 역사교육 내실화		
	① 체험학습 중심 역사교육 지도서 개발 및 보급	교육부	불수용
	② 역사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부	부분수용
	1-1-2. 역사 특성 인재 양성		
	③ 역사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 확대	교육부	부분수용
	④ 역사 영재 발굴 및 양성	교육부	부분수용
	1-2. 역사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확대		
	1-2-1. 역사교육 정보 접근성 강화		
	⑤ 한국사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확대	교육부	불수용
	⑥ 역사교육 통합 사이트 제작 및 보급	교육부	부분수용
	1-2-2. 역사 콘텐츠 개발 확대		

	⑦ 역사교육 뷰(view) 프로그램 개발(v-world)	국토교통부	부분수용
2. 활동	2-1.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 활성화		
	2-1-1. 청소년시설 역사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강화		
	⑧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역사부문 강화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부분수용
	⑨ 지역사회 역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국가보훈처	부분수용
	2-1-2. 청소년 역사이해 교류프로그램 강화		
	⑩ 한민족 청소년교류기회 확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수용
	⑪ 역사이해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국가보훈처 외교부	수용
	⑫ (가칭) 'H-Train' 등 국내 역사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국토교통부	부분수용
	2-2. 청소년 역사이해 프로그램 기반 조성		
	2-2-1. 청소년지도자 역사분야 전문성 강화		
	⑬ 청소년지도자 역사이해 전문연수프로그램 개설 운영	여성가족부	수용
	⑭ 청소년지도자 역사탐방 기회 확대	국가보훈처	수용
	2-2-2. 역사이해 프로그램 청소년참여 확대		
	⑮ 청소년 또래문화해설사 양성	문화체육관광부	부분수용
	⑯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사업 활성화	문화재청	수용
3. 홍보	3-1. 이벤트를 이용한 역사 홍보		
	3-1-1. 청소년대상 역사홍보 축제 및 대회 확대		
	⑰ 역사를 테마로 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발굴 지원	여성가족부	수용
	⑱ 학교 역사 축제 및 대회 지원 확대	교육부	부분수용
	3-1-2. 역사홍보 중점기간 지정 운영		
	⑲ 역사주간(가칭) 신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불수용
	3-2. 역사홍보의 다각화		
	3-2-1.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홍보 강화		
	⑳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역사홍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부분수용
	㉑ 역사외국 대응 전문사이트 개발 지원	교육부	부분수용
	3-2-2. 테마 중심 역사홍보 강화		
	㉒ 테마가 있는 역사의 거리 발굴 및 홍보	문화체육관광부	부분수용
	㉓ 청소년이 만드는 역사 공익광고 제작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부분수용

2 정책과제 정부 검토의견

1. 교육

1-1.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1-1-1. 역사교육 내실화

◇ 제안배경

- 기존의 학교 역사교육 시간이 부족하여 역사 학교수업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 증대
 - 2013년도 시사저널에서 조사한 ‘한국 역사에 대한 학교 수업이 더 필요하다고 보나?’ 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중고등학생들의 74.2%(필요 47.4%, 매우필요 26.8%)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여 필요없다 6.3%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중학생은 82.6%가 필요하다고 응답.(시사저널, 2013.6.24.)
- 역사수업 방식이 강의식, 문제풀이 중심의 암기식 방식이 대부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 중심 역사수업 필요
 -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입시 위주의 역사수업 진행. 즉,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가 일방적인 강의식 설명을 하고 문제 풀이를 하며 학생들은 그 내용을 암기해서 시험을 치르는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넓은 학문인 역사를 일반적인 강의식 설명이 아닌 학생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다채롭고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요구됨.
- ‘15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에 교원의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식 전문성과 더불어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연수 및 교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① 체험학습 중심 역사교육 지도서 개발 및 보급

- 기존 역사교육 지도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험형 역사교육 지도서 개발 및 일선학교 보급
- 체험학습 중심 역사교육 지도서 개발 과정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

② 역사교사 전문성 강화

- 행정업무 효율화 및 간소화를 통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환경 조성으로 역사교사의 수업준비 시간 확보
- 역사교사의 직무연수 강화뿐 아니라 교육내용, 방법에 대한 교류 기회 확대
- 올바른 역사 인식 및 외국의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연수 활성화

1-1-2. 역사 특성 인재 양성

◇ 제안배경

- 우리나라 현실상 입시체제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이 미비함.
-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역사 왜곡 등에 대하여 토론이나 객관적 근거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역사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의 절대적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
- 따라서 다양한 역사관련 분야를 선두에서 이끌어 갈 역사 특성 인재 청소년의 양성은 매우 중요함.

◇ 정책과제

③ 역사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확대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단순한 역사성적 우수자가 아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청소년 역사인재 양성을 위하여 역사인재양성장학금 추진 필요

④ 역사 영재 발굴 및 양성

- 역사 분야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적 인재양성을 가능하게 하여 21세기 국제사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역사영재 발굴 및 양성

1-2. 역사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확대

1-2-1. 역사교육 정보 접근성 강화

◇ 제안배경

-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이 매우 낮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
 - 6.25전쟁에 대해 실시한 국가보훈처의 조사에 따르면, 모른다는 응답이 20대 이하 23.2%, 30대 7.8%, 40대 7.7%, 50대 6.7%, 60대 이상 9.7% 등으로 나타남. (국가보훈처, 2013, 6.25전쟁 정전 60주년 국민의식 조사)
-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가 역사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접근가능성이 높은 역사인식 함양 콘텐츠 개발 필요.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 잘 보급되어있는 온라인,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개발한 콘텐츠 보급
 -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 90.8%), 싱가포르(87.7%), 사우디아라비아(86.1%)에 이어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4위 (KT경제경영연구소, 2015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 정책과제

⑤ 한국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확대

- 토론, 뉴스, 인물 등 탭으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전국 역사박물관, 유적지 등의 정보제공 및 어플리케이션 예매 시 할인, 해설사 및 가이드 예약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 제공

⑥ 역사교육 통합 사이트 제작 및 보급

- 현재 운영하는 역사교육 사이트를 통합하여 제작·보급함으로써 청소년이 보다 쉽게 역사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정보시스템 참고

1-2-2. 역사 콘텐츠 개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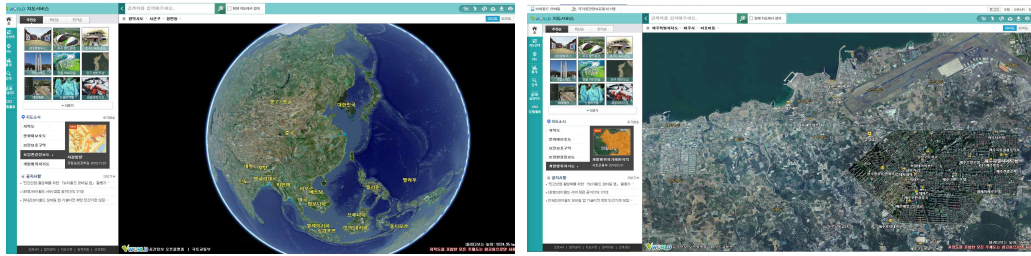
◇ 제안배경

- 역사적 사건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시간적 개념과 더불어 공간적 개념이 동시에 존재함. 따라서 지리적 요소는 역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문숙원, 2006).
- 따라서 지도 및 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역사교육에 활용한다면 더욱 내실있고 편리한 교육이 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V-world에 역사교육 관련 콘텐츠를 결합함으로써 청소년 역사교육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정책과제

⑦ 역사교육 뷰(view) 프로그램 개발 (V-world)

-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브이월드(V-world) 지도 서비스’를 역사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보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여 교과서의 역사적 사건을 지도를 통해 구현
- 상단에 휠을 통해 사용자가 조절하거나 시기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가 다양한 시대의 모습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도록 함.
- 과거의 시물레이션 이미지는 사료를 통해 역사 전문가들과 함께 구현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V-world

2. 활동

2-1. 청소년 역사 프로그램 활성화

2-1-1. 청소년시설 역사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강화

◇ 제안배경

-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수준이 낮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위하여 지역사회 단위 청소년역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들도 지역역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⑧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역사부문 강화

- 현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부문은 활동, 참여, 보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활동 부문에 역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미미한 수준임. 이에 역사 프로그램 지속 운영을 위해 공모사업 역사부문 강화 필요성이 있음.
-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프로그램 등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여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역사교육 관련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⑨ 지역사회 역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현재 청소년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역사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역사프로그램 활성화 기여
- 역사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개최를 통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로 전국 시설에 보급

2-1-2. 청소년 역사이해 교류프로그램 강화

◇ 제안배경

- 현재 동북아 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한 역사인식이 좋지 않아 그들과의 교류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인식개선 필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프로그램은 예술교류가 주로 이루어짐. 향후 교류프로그램에 서로의 역사를 이해하는 역사관련 프로그램 확대 필요
- 기존 역사교류프로그램이 소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수 청소년이 수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내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⑩ 한민족 청소년교류기회 확대

-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나라사랑프로그램 및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에 중국동포 등 해외 한민족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 역사·문화 상호교류프로그램 추가 및 확대

⑪ 역사이해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단순교류를 뛰어넘어 역사토론회, 역사적 장소탐방 등 역사를 주제로 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⑫ (가칭) ‘H-Train’ 등 국내 역사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국내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역사열차(History-Train)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다수의 청소년이 역사장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2-2. 청소년 역사이해 프로그램 기반 조성

2-2-1. 청소년지도자 역사분야 전문성 강화

◇ 제안배경

- 청소년 역사인식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역사이해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담당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필요
- 교내에서만 배우는 한국사가 전부인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교과서와는 다른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필요함.

◇ 정책과제

⑬ 청소년지도자 역사이해 전문연수프로그램 개설 운영

-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에서 진행하는 지도자연수 프로그램에 역사 관련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⑭ 청소년지도자 역사탐방 기회 확대

- 국내외 역사탐방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이 역사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

2-2-2. 역사이해 프로그램 청소년참여 확대

◇ 제안배경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있듯 역사인식이 부족하다면 밝은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힘들.
- 교육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2017년 수능부터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한국사 과목을 의미있는 역사교육보다는 외우는 과목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청소년 스스로 역사교육의 동반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 ‘청소년문화해설사’는 문화유산을 배우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며 이의 활성화가 요구됨.

◇ 정책과제

⑮ 청소년 또래문화해설사 양성

- 지자체별로 각 지역 역사, 문화, 먹을거리 등을 해설하는 전문가가 있으나, 청소년 또래 간 문화를 해설해주는 전문가는 없음.
- 이에 역사 문화정보를 청소년이 서로 공유하고 해설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역사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청소년 또래문화해설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⑯ 청소년문화재지킴이 사업 활성화

- 현재 문화재청에서 소중한 문화재를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가꾸고 지켜나감으로써,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뿐 아니라 문화재를 가꾸는 문화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의미로 ‘문화재지킴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재지킴이를 홍보하고 활성화

3. 홍보

3-1. 이벤트를 이용한 역사 홍보

3-1-1. 청소년대상 역사홍보 축제 및 대회 확대

◇ 제안배경

-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선정해 수업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교과수업보다 쉽고 재미있게 청소년들이 역사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과영역이 아닌 축제, 대회 등 콘텐츠로 만듦으로써 청소년들이 역사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⑰ 역사를 테마로 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발굴 지원

-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에 청소년들이 역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공연을 진행하고 부스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역사를 테마로 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기획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다양한 지원 확대

⑱ 학교 역사 축제 및 대회 지원 확대

- 교내 역사동아리가 주체가 되는 역사축제 장려. 즉,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다양한 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에 대한 지원 강화

3-1-2. 역사홍보 중점기간 지정 운영

◇ 제안배경

- 국가기념일이란 1973년에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¹⁾에 따라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를 설정하여 자체예산을 확보, 기념식과 부수행사를 전국적인 단위로 시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간이나 월을 지정하여 부수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됨.
- 국가에서 지정한 역사 국가기념일을 기반으로 해 역사주간을 설정하여, 청소년들이 좀 더 친근하게 역사에 다가가고, 관심을 환기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과제

⑩ 역사주간(가칭) 신설 운영

- 광복절 전후 1주(8/9~22) 중 일주일을 택하여 역사주간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시행
- 역사주간 중 5대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무료개방 등의 다양한 이벤트로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역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
- 역사기념일 지정이 힘들 경우 지역단위 교육기관(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과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단체,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역사주간 설정 및 운영 유도

1) 대통령령 제 24142호

3-2. 역사홍보의 다각화

3-2-1.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홍보 강화

◇ 제안배경

-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청소년들의 역사의식과 인식 수준은 낮은 편임. 최근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함양이 필요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임.
-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역사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효과적인 홍보방안이 있어야 함.

◇ 정책과제

㉟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역사홍보 강화

-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통합 역사알림페이지를 제작하여 역사홍보 강화
-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위인에 대한 PC용 혹은 스마트폰용 게임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역사 접근성 강화

㉠ 역사왜곡 대응 전문사이트 개발 지원

-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역사왜곡대응 전문사이트인 ‘동북아역사넷’ 접근성 강화를 위해 홍보 및 콘텐츠 강화

3-2-2. 테마 중심 역사홍보 강화

◇ 제안배경

- 2008년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사전보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활성화 방안 중 지역관광 매력을 높이는 관광자원 확충 부문을 지자체 역사홍보를 통해 시행함.
- 언론매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역사홍보의 필요성 증대 및 공공시설 홍보 여건 발전에 부합하는 홍보 강화

◇ 정책과제

㉔ 테마가 있는 역사의 거리 발굴 및 홍보

- 전국 각 지역에 역사와 관련된 거리 및 동상 등을 조사하여 ‘전국역사거리지도’ 제작 및 홍보
- 홍보가 부족하여 방문이 저조한 역사의 거리 등 역사 관련 장소에 대한 콘텐츠 추가 개발 및 홍보

㉕ 청소년이 만드는 역사 공익광고 제작지원

- 방송국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만드는 역사 공익광고 공모전 개최 및 우수 공익광고 방영
- 역사 공익광고 제작 시, 청소년 대상 공모전 등 개최

2 정책과제 정부 검토의견

1. 교육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① 체험학습 중심 역사 교육 지도서 개발 및 보급	불수용	○ 체험형 역사교육 지도서 개발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예산문제로 인하여 수용 불가 ○ 추후 예산확보가 되어 지도서 개발 시 지도서 개발 및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음.	교육부
② 역사교육 전문성 강화	부분 수용	○ 행정업무 및 효율과 간소화를 통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환경 조성으로 역사교사의 수업준비 시간 확보 및 연수 활성화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교육부
③ 역사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 확대	부분 수용	○ 역사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 제도 확 대 - 인문100년 장학생 선발 시 예산(확 대)반영 추이에 맞춰 역사학 분야의 대 학생을 선발·우대 예정	교육부
④ 역사 영재 발굴 및 양성	부분 수용	○ 역사 영재 발굴 및 양성 - 영재교육 영역을 다양화하고 활성화 하려는 교육부 추진방향과 부합함. - 다만, 예산반영 및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도록 하겠음.	교육부
⑤ 한국사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급확대	불수용	○ 한국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확대에는 16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	교육부
⑥ 역사교육 통합 사이트 제작 및	부분 수용	○ 현재 운영하는 역사교육 사이트 통합하여 제작·보급하는 문제는 충분한 검토 후	교육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보급		진행하겠음	
⑦ 역사교육 뷰 (view) 프로그램 개발 (v-world)	부분 수용	<p>○ 공간 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 v-world) 지도 서비스를 역사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보강</p> <p>- 브이월드는 국가공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p> <p>- 행자부 및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콘텐츠 개발보다는 공간정보 제공, Open API 서비스를 통한 공간정보산업 및 관련 융복합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중</p> <p>*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행자부 국무회의 보고, 2015.1월)</p> <p>-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브이월드(국토부)는 공간정보 및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관련 기관 또는 민간영역에서 관련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p>	국토 교통부

2. 활동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⑧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역사 부문 강화	부분 수용	<p>○ 2015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광복 70주년 기념 역사바로알기, 항일유적지 탐방 등 역사체험 프로그램 지원(9개, 신규)</p> <p>○ 2016년 공모사업 추진 시 역사 프로그램을 지속 선정·운영 예정</p> <p>* 공모사업 예산 축소('15년 1,770백만원 → '16년 1,304백만원)로 '15년대비 확대 지원은 어렵지만 현행 역사분야</p>	여성 가족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선정비율은 유지	
	부분 수용	○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확대 검토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 전국 청소년 관련 민간기관, 단체 등의 창의적인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사업(공모) 추진 중 * '15년 29개 기관 운영 지원 중	국가 보훈처
⑨ 지역사회 역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부분 수용	○ 지역사회 역사프로그램 확대 검토 - 지역 내 현충시설 탐방을 위해 지역 주변 초·중·고 학급 단위 지원 중 * '14년 56,972명 탐방 실시	국가 보훈처
⑩ 한민족 청소년 교류기회 확대	수용	○ 한민족 청소년교류간 역사·문화 체험기회 확대 - 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 프로그램 중 재외동포청소년과 국내청소년 간 역사·문화 상호교류 프로그램 시행 · 중고생프로그램(2차) : 일일학교체험 (국내중고등학교 방문, 체험)프로그램 진행 시 역사·문화 프로그램 추진 · 대학생(3차) : 공공외교포럼 진행시 역사·문화 시 역사·문화 프로그램 기획	외교부
	부분 수용	○ 청소년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 내 중국동포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 간의 교류활동 기회를 마련	여성 가족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현지 교류기관 발굴 및 현장 실사를 통한 교류가능성 검증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⑪ 역사이해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이해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검토 필요 - 독립기념관에서 중국 내 기념관 등과 국제교류프로그램 실시 중 -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각 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개발 등 검토 필요 	국가 보훈처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교류사업 시행 시, 역사를 주제로 한 탐방 프로그램 확대 - 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 프로그램 중 역사탐방 프로그램 병행시행 검토 (‘15년의 경우 창의한국현장체험 프로그램 진행) · 중고생프로그램(2차) : 지방전통문화체험(지역 역사유적지), 서울시티투어 진행 시 역사탐방 프로그램 시행(서대문형무소 → 독립공원 → 독립문 → 보신각 <3.1운동 기념터> → 탑골공원 <3.1운동기념비>) · 대학생(3차) : 광복70주년 대한민국 근대사투어 시행(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이순신장군 동상>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 덕수궁 <석조전> → 중명전 → 옛 러시아 공사관 → 인사동 쌈지길) - 추후 역사 테마별 탐방 프로그램 기획 검토 	외교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⑫ 'HTrain' 등 국내 역사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열차(H-Train)를 개발·운영 시 차량개조비, 운영비 등이 소요되므로 철도운영자가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용수요, 수익성 등이 담보되어야 함. ○ 차량 개조를 통해 '14년부터 운영 중인 교육전용열차(E-train)의 경우 수익성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H-train 개발·운영은 E-train 이용수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E-train 열차에서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중 	국토 교통부
⑬ 청소년지도자 역사이해 전문 연수프로그램 개설 운영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 기간 중 특강형태의 역사이해 교육 강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역사현안 알기-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3회/423명) ○ 2016년 연수과정에 역사인식 교육 반영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과정 중 역사인식 관련 과정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형의 짧은 연수를 시범 적용 후 점차 확대 운영 - 전문연수 외 연수(직무, 보수연수 등)에서는 특강 형태의 강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운영과 유사한 형태로 역사관련 이슈되는 주제를 바탕으로 특강 형태의 진행 	여성 가족부
⑭ 청소년지도자 역사탐방 기회 확대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교원 대상 국내외 사적지 탐방 지원 사업 실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역사 	국가 보훈처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p>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나라사랑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내외 사적지 탐방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p> <p>※ '14년 15개 단체, '15년 20개 단체 지원</p>	
⑮ 청소년 또래 문화 해설사 양성	부분 수용	<p>○ '청소년 또래문화해설사 양성'</p> <p>-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의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 사업으로, 해설사 선발 및 활용 등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제한은 없어 현재 청소년도 지원 가능함</p>	문화 체육 관광부
⑯ 청소년 문화재 자킴이 사업 활성화	수용	<p>○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사업 활성화</p> <p>- 미래 문화재 주인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사랑 운동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이행 중임</p> <p>- 연 3회(4월, 6월, 9월) 문화재지킴이 위촉을 통하여 현재 2만4천여 명(2015.7월 기준)의 청소년 문화재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음</p> <p>- 연 1회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한마당을 개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문화재지킴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1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며 우수사례팀에게는 문화재청장상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있음.</p> <p>- 향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사업은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모니터링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p>	문화 재청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⑪ 역사를 테마로 한 청소년어울림마당 발굴 지원	수용	○ 시·도 어울림마당(16개소) 및 시·군구 어울림마당(110개소) 운영 시 청소년들이 역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공연 및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 시달	여성 가족부

3. 홍보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⑪ 학교 역사 축제 및 대회 지원 확대	부분 수용	○ 학교 역사 축제 및 대회 지원 확대 - 교내 축제 중 역사 관련 부스 설치 장려 ※ 역사동아리 구성된 학교는 동아리 주체로 부스 운영 - 역사골든벨 등 역사 관련 다양한 대회를 교내 개최 장려	교육부
⑪ 역사주간 신설 운영	불수용	○ 교육부 주관, 인문주간이 기 지정 ('15.10.26~11.1)되어 정착, 시행 중 - 연간 6.7만여명 참여하는 주간으로 활성화 중인 바, 역사주간의 신설보다 역사, 철학을 포괄하는 인문주간에서 역사 부분의 홍보를 중점 시행이 효과적 ○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 보급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소관 업무 - 한국사의 연구·편찬, 교육·연수, 한국사의 보급, 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주간을	문화 체육 관광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주관하여 실시하되, 기간 중 박물관 무료개방 등의 이벤트는 문체부에서 검토, 협조 가능 * (교육부 및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국사편찬위원회는 …중략…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불수용	○ 역사주간 신설 운영 - 기념주간의 제정은 「기념일에 관한 규정」상 해당 부처에서 기념주간 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행자부로 요청 - 행자부에서는 제정취지, 타 기념일과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 다만 역사주간 제정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황이 아니고 역사주간의 취지 내용 등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함.	행정 자치부
②0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역사 홍보 강화	부분 수용	○ 제안 속 사회관계망서비스용 통합 역사알림페이지는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개선, 활용을 위해 역사 관련 업무를	문화 체육 관광부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p>담당하는 부처 및 기관(예 :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p> <p>○ 다만 사회관계망을 통한 역사 관련 홍보는 소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 가능</p>	
②1 역사왜곡 대응 전문사이트 개발 지원	부분 수용	<p>○ 동북아역사넷의 콘텐츠 강화를 추진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역사넷은 역사왜곡 대응 역사 원문자료와 대중용 웹콘텐츠 및 역사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2012년 동북아역사넷 웹사이트 오픈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역사현안 대응 원문자료와 웹콘텐츠를 꾸준히 제작 하여 보급하고 있음 - 향후 지속적인 데이터 및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강화하겠음 <p>○ 동북아역사넷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 개편을 추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역사넷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PC 및 모바일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SNS 공유가 원활하도록 현재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음(12월 말 완료) 	교육부, 동북아 역사 재단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현안 대응 자료의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역사넷의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부스 개설 및 운영(2013~2014 미국 아시아학회, 2013~2014 제주포럼, 2014~2015 국가DB 활용교육 및 전시회 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있음. - 향후 데이터베이스 전시회 및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수단을 모색하겠음. 	
②② 테마가 있는 역사의 거리 발굴 및 홍보	부분 수용	○기존에 수행중인 다양한 지자체 도시 여행 프로그램에 연계 가능	문화 체육 관광부
②③ 청소년이 만드는 역사공익광고 제작지원	부분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과 연계하여 청소년이 만드는 역사 공익광고 공모전 개최 및 우수 공익광고 방영 ○ 역사 공익광고 제작 시, 청소년 대상 공모전 등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9~24세)와 중첩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매년 시행하고 있어 별도 공모전 추진은 어려우나, 다만 향후 '대학생 광고 공모전' 추진 시, '역사' 주제 반영과 광고 집행을 검토하겠음. 	문화 체육 관광부
	부분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	방송

정책과제	수용 여부	검토의견	소관 부처
	수용	<p>공사를 통해 매년 11월 공익광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청소년부를 별도로 신설하여 수상자에 대해 시상할 계획임.</p> <p>○ 청소년이 제작한 역사공익광고에 대한 방송 여부는 방송사의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법상 관여할 수 없으며,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p> <p>※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p>	통신 위원회

제4장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의 평가



1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평가회의

□ 개 요

- 일 자 : 2015. 12. 11.(금)
- 장 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참석자 : 총 30명
 - 의장단 2명, 지역회의 청소년 위원 대표 및 지도자 19명
 - 전문가, 청소년운영지원단 3명, 여성가족부 및 진흥원 5명
- 주요내용
 -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 제12회 청소년특별회의 발전방안 및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논의

□ 주요결과

- 지도자 토의 결과

구분	내용
홍보	교육부에 공문을 통한 모집 안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청소년특별회의 홍보대사, 전략회의
	참여 청소년 및 담당 지도자에게 포상 확대
추진 흐름	의제선정 및 위원모집 시기 조정 필요, 정책의제 관련 전문가 구성(2월)
	참여기구 위원 모집 공고(3월 중), 출범식(3월 말)
추진 기구	전문가 자문은 정책과제 제안 시기에 맞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운영 필요
	대변인의 역할 강화
발전 방안	역대위원 및 인력 풀 관리 필요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역량 지수 확인 필요
	중장기 체계 마련(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 청소년 토의 결과

구분	내용
의제 연구	출범식 이전, 정책의제 후보군 사전 공지
	지역에서 모니터링 시행 이유와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
	의제연구 교육이 필요
	검토의견이 본회의 자료집에 담겼으면 좋겠음.
	정책과제 건의 시, 정책과제를 시행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 참석요청
추진 기구	역대위원과 지역대변인의 역할 강화 필요
	운영지원단의 수 증가
기타	위원 간 교류할 수 있는 시간 확대(온라인 회의 등)
	중앙회의 시, 전달체계 마련 및 공지

붙임자료

2014년 제10회 청소년특별회의 모니터링

□ 정책과제 총괄표

영역	정 책 과 제	수용 여부	이행 여부
1.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input type="checkbox"/> 우리가 만들어 가는 청소년 안전		
	● 학생이 함께하는 안전학교 만들기		
	① 학교별 ‘학생 안전모니터링단’ 설치·운영	부분 수용	부분 이행
	② 모니터링 결과반영 점검 강화	불수 용	
	● 또래조정 및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③ 또래조정자 및 또래상담자 양성체계 강화	수용	완료
2. 청소년 의 안전 을 위 한 인프라 구축	<input type="checkbox"/> 학교 및 청소년시설 안전기반 확충		
	●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강화		
	⑤ 체험형 학생 안전교육 확대	수용	완료
	⑥ 교직원 안전교육 의무화	수용	완료
	● 청소년안전체험 센터 설치·운영		
	⑦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 및 운영	수용	완료
	⑧ 청소년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수용	완료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청소년안전 체제 구축		
	● 가칭 ‘안전누리존(Zone)’ 설치 및 운영 활성화		
	⑨ 지역별 가칭 ‘안전누리존(Zone)’ 지정·운영	부분 수용	부분 이행
	⑩ ‘안전누리존(Zone)’ 환경개선	부분 수용	미이행
	⑪ ‘안전누리존(Zone)’ 내 아동·청소년지킴이 제도 강화	부분 수용	완료
	● 청소년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연계 협력 강화		
3. 권익 증진을 통한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근로안전 증진		
	● 청소년 근로환경 신고 및 점검 시스템 강화		
	⑭ 청소년근로계약 의무사항 이행점검 강화	부분 수용	완료

영역	정 책 과 제	수용 여부	이행 여부
안전 환경 조성	⑮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근로 권리 정보제공	수용	완료
	⑯ 청소년근로신고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수용	완료
	● 청소년근로관련 홍보강화		
	⑰ 청소년대상 근로 인권교육 강화	수용	완료
	⑱ 연소자근로관련 법 및 정책 홍보강화	부분 수용	완료
	□ 청소년 권리증진		
	●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기회보장		
	⑲ 청소년의 참여로 구성·운영하는 여가공간 '새참' 운영	수용	미행
	⑳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문화존 활성화	수용	완료
	㉑ 농어촌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확대	수용	완료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㉒ 문화누리카드 편의성 증대	부분 수용	완료
	㉓ 문화누리카드 대상 및 서비스 확대	부분 수용	부분 이행
'특별' 청소년 참여 기반 강화	□ 청소년참여 활동 강화		
	● 청소년참여기구 내실화		
	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질적 내실화	부분 수용	완료
	㉕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강화	수용	완료
	● 청소년 관련 위원회 청소년 참여 보장		
	㉖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생 참여보장	불수 용	
	㉗ 청소년분야 각종 위원회의 청소년참여 확대	수용	부분 이행
	□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확대		
	● 청소년 선거권 확대		
	㉘ 교육감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불수 용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강화		
	㉙ 청소년 모의선거제도 도입	수용	부분 이행

영역	정 책 과 제	수용 여부	이행 여부
	㉔ 학교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부분 수용	부분 이행
	㉕ 청소년주도 선거공약 제안 및 평가제도 도입	수용	완료

1 청소년참여로 만드는 안전

□ 우리가 만들어 가는 청소년 안전

● 학생이 함께하는 안전학교 만들기

① 학교별 ‘학생안전모니터링단’ 설치·운영

<교육부>

부분
수용

부분
이행

- 학생회에 ‘학생안전모니터링단’ 설치·운영

☞ 희망 학생 대상으로 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교내 자치기구인 학생회에 ‘학생안전모니터링단’을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운영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매뉴얼을 제작하고, 매뉴얼에 따른 안전장치들을 확인체크표에 기입하여 점검

※ 모니터링 결과



고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안곡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공동으로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젝트인 ‘청소년 안전모니터링단 A-Team’ 발대식을 가졌다. ‘청소년 안전모니터링단 A-Team(이하 A-Team)’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분야별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아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 스스로 학교 및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공익적 활동을 주도하는 청소년 활동가를 길러내는 프로젝트다.

‘A-Team’은 지난 2013년 고양교육청과 안곡중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양 마을! 청소년이 꿈을 꾸다’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했으며 교육부 주관 제2회 학생봉사활동 이야기 공모전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지역의 저소득층 고등학교 공부방인 ‘배움누리센터’와 공동으로 중·고 학생 연합 청소년 안전모니터단을 운영했다.

또한 올해는 안곡중학교가 주관 사업교로 지정돼 가람초, 능곡초, 백신초, 백석중, 성사중 등 5개 학교가 함께 공동사업으로서 고양교육지원청 제3기 학생안전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가했다.

‘A-Team’은 처음 시도하는 의미에서 알파벳의 첫 자 A와 Awesome

(기막히게 좋은, 굉장한)의 A를 따서 청소년들이 직접 이름을 짓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안전 영역에서의 직접 문제를 찾아 해결해가는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진행된다.

모든 진행은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청소년이 팀을 형성해 협업을 하게 되며 스스로 만들어 낸 과정과 결과를 글과 사진 그림 등으로 정리하고 대중 앞에서 보고하거나 정부 안전신고 포털사이트인 안전신문고에 제안 접수 토록 한다.

이 프로젝트는 연세대학교 방재안전연구센터가 자문해 주고 고양시청 안전도시과, 동서발전(주) 일산열병합발전처, 고양원마운트, 한국청소년육성회 일산지자 등 지역의 민·관이 함께 응원해 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을 위한 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양원마운트(대표이사 석준호)가 2013년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의 청소년안전모니터링 및 대안교실(니들스쿨) 확대 실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심학경 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빛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마을을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작은 움직임이 국가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327>

- 학교안전관리사 신설·배치

☞ 교원대상 전문적인 안전교육 실시 후, 학교안전관리사 역할 부여

② 모니터링 결과반영 점검 강화

<교육부> 불수용

- 학생들의 직접적인 모니터링으로 학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

☞ 전국학교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학교 인센티브 부여

● 토래조정 및 토래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③ 또래조정자 및 또래상담자 양성체계 강화

<교육부>	수용	이행
<여성가족부>		완료

- 또래조정자 선정 시, 양성교육 의무화

☞ 또래조정자 선정 시, 또래조정의 교육과정을 시행토록 조치

※ 모니터링 결과

☞ 교육부 2015년 주요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범죄 없는 학교 실현을 하기위한 추진과제로 또래활동의 확대를 제시함. 학생이 주도하는 다양한 또래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고, 기본 또래활동을 “친구사랑 동아리”로 통합·확대할 계획임. “친구사랑 동아리”는 교우관계

갈등 문제 등에 대한 또래상담·조정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활동, 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전개

교육부는 “친구사랑 동아리”를 2014년 200교에서 2019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 추진하기로 하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으로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예정임.

구분	또래상담	또래조정	블루밴드 동아리
내용	학생 개인의 고민을 또래상담자의 상담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활동	학생 간 갈등을 또래 조정자가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	학교폭력 예방 서약 참여, 캠페인 활동 등 자율적 활동
학교 수	(12년) 4,638교→(13년) 5,127교 →(14년) 6,336교	(12년) 79교→(13년) 1,448교 →(14년) 845교	(12년) 100교→(13년) 150교 →(14년) 200교

- 2013년 기준 5,217개 학교 7,310명의 또래 상담자를 양성, 이에 따른 또래상담자 수료 이후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또래상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모니터링 결과

☞ 또래조정 양성교육은 부산과 경기도 등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또래조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광주와 부산처럼 경실련 등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또래조정 프로그램은 갈등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조정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15시간에서 20시간을 수료하면 또래조정자로서 활동할 수 있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내 초·중·고교 83곳, 400개 학급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인 ‘모든 아이들은 별이다, 스타 칼리지’ 진행

출처: 경인일보, 2015.06.03/ 소년한국일보, 2015.05.19. / BBS 뉴스, 2015.03.05.

- ☞ 지역별 교육지원청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또래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별도로 또래상담자 양성과정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음.
- ☞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은 최소 12시간이상, 초등학생은 8시간에서 12시간의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다양한 또래상담활동이 가능함.

출처 : 또래상담(<http://www.peer.or.kr/default.asp>)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https://www.kyci.or.kr/index.asp>)

④ 또래조정 및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부> 수용 이행 <여성가족부> 완료

- 정기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또래조정 프로그램 보급
 - ☞ 애플데이와 같이 학교에서 전교생 혹은 학급단위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며, 각 학교에서 상담교사가 1년에 두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
 - ☞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매뉴얼 책자 제작·배포
 -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내 정기 프로그램 운영
- 또래조정 홍보 활성화
 - ☞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피켓홍보, 영상시청, 학교행사 시 홍보물 부착, 또래 조정 활동 바로알기 퀴즈대회 등과 같은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모니터링 결과

- ☞ 학교폭력예방포털 사이트 도란도란(<http://www.peermediation.or.kr>)에서 또래조정에 관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그리고 초등교사와 중·고등교사를 대상으로 홍보동영상과 운영 매뉴얼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또래조정 관련 자료를 게시해두었음. 그러나 2015년 올해 제

작성된 자료는 없었음.

- ☞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안전 교과(단원)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주요 교과에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과정 예시〉

주제	안전교육
영역	폭력 및 신변보호
중분류	학교폭력
소분류	집단따돌림
주요내용	예방 및 대처법
초1~2	틀림과 다름의 이해
초3~4	또래중재 역할극
초5~6	또래조정 : 갈등해결 조력(토론)
중1~3	또래중재 및 상담
고1~3	신고접수, 법률상 처분 및 실제 사례

- ☞ 각 지역별로 많은 학교들이 또래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 중임.

대구 대서중학교 ‘3-Level 또래조정프로그램’ 운영, Lever 1(즉시 또래 조정)-Level 2(신청 또래 조정)-Level3(학폭 또래 조정)으로 갈등 사안의 정도를 고려해 레벨을 나눠 신속하고 적용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구성, 또래조정에서 끝나지 않고 ‘또래조정 감성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화로 합의한 이후에도 토요스포츠클럽 등 학교프로그램을 함께 하도록 권장해 친해질 기회를 마련한다.

또래조정자 양성교육 이수 이후 교육내용을 ‘또래조정자 역량 UP’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중이다.

부천교육지원청 초·중·고 또래조정인 500여명과 지도교사 120여명을 대상으로 ‘2015 부천 소나기 학생캠프’ 개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학생들이 주체가 돼 해결하는 또래조정 프로그램과 학교 내 생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회복적 생활교육을 브랜드화

온양풍기초등학교 또래조정 힐링동아리 학교 내에서 배려, 질서캠페인 실시

용머리초등학교 또래조정자 교육을 받은 학생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합동 캠페인 실시

예산 양신초등학교 또래조정봉사동아리 욕설금지 규정 제정,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경로당 봉사활동, 환경정화활동, 전교학생회와 연계하는 학생 자치법정, 한마음의 날 개최, 어울림 한마당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아산 탕정초등학교 또래조정 상담동아리 스스로 우체국을 만들고 편지쓰기 활동을 이끌어가는 ‘알토랑 우체국 사과편지 배달’ 행사 진행

제주 남원중학교 또래조정 교육에 더해 친구사랑 캠페인 병행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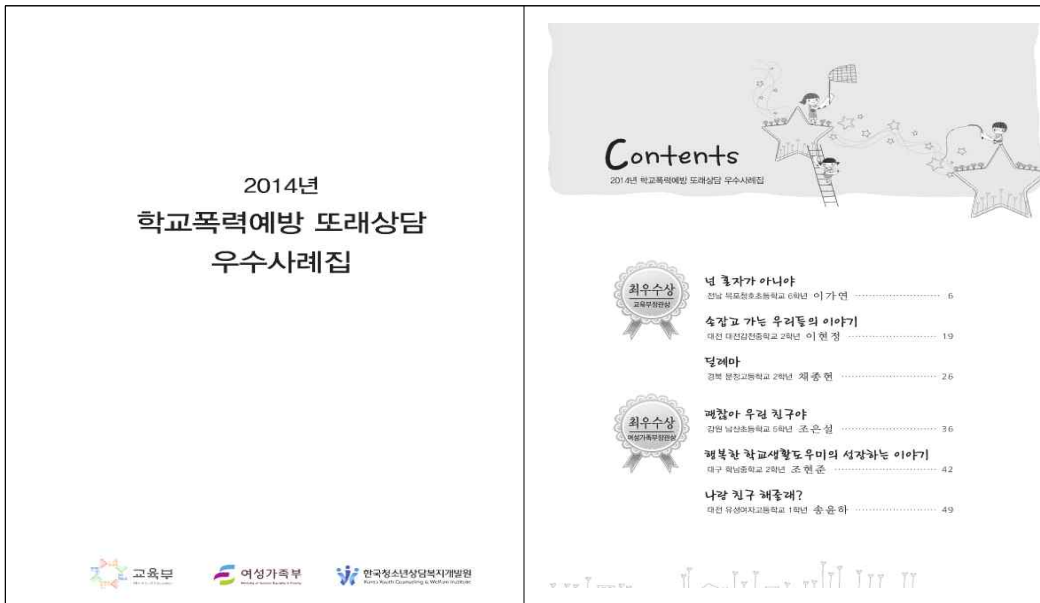
☞ 또래상담 우수사례 발굴, 대상자 연합 워크숍 개최 등

※ 모니터링 결과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솔리언또래상담 교육과정과 웹교재 등의 자료가 있으며, 별도로 또래상담이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음. 매년 새로운 자료들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음.

또한, 또래상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또래상담 우수사례 보고 대회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음.

경남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함양군 또래상담자 연합회 발대식’ 개최
또래상담자 연합회는 시·도또래상담자연합회행사 참가, 전국또래상담자연합회 참가, 상담자연합회 사례교육, 또래상담자연합회 캠페인 활동, 우수사례 발굴, 또래상담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활동을 하게 됨.



출처 : 또래상담 (<http://www.peer.or.kr/default.asp>)

신아일보 , 2015.07.2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index.asp>)

2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교 및 청소년시설 안전기반 확충

◎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강화

⑤ 체험형 학생안전교육 확대

<교육부> 수용 이행
<여성가족부> 완료

-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실제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예) 지진대피훈련, 화재 대피훈련 등

- 소집단 안전교육 실시

☞ 대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지양하고, 학급별 또는 소집단 단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효과성 제고

- 교과과정에 안전교육 시간 배정

☞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교과 과정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 모니터링 결과

☞ 학교 내 안전 교육 실시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15년 고시/ '18년 적용)시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위 설치 추진*

* 초등 1~2학년은 통합교육과정에 「안전생활」 교과 신설 검토 / 초등 3학년~고등 3학년은 체육, 기술가정, 과학 등 관련 교과에 안전 단위 신설

○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고, 표준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단위 구성 및 수업 활용('14 하~)

* 재난/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유해, 사이버/직업/응급처치

☞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 학교·기숙사 소방대피훈련 등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종합안전 체험관 확충 및 이동안전체험버스 시범운영 실시

※ 종합안전체험관 : 폐교 등 활용 전국 4개 권역별 1개 건설(' 14. 하 ~)
이동안전체험버스(가칭 “안전행복버스”) : 4개 교육청 시범사업(' 14. 하 ~)

- 수상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초등 3학년 대상 수상안전교육 시범 교육 실시

※ 초등 3학년 수상안전교육 시범교육지원청 지정(33개 교육지원청, 6만여명 대상, ' 14. 9월 ~)

※ 현재 서울·오산 등 교육(지원)청에서 초3학년 전체학생 대상 수영 실기 교육 실시(서울: ' 12~, 12차시/ 오산: ' 13~, 15차시)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교육부

⑥ 교직원 안전교육 의무화

<교육부>

수용

이행
완료

- 교원 양성과정에 안전교육 비중 확대

☞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교육과정 중 안전교육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의식 강화

-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 교원 임용 시, 평가요소로 안전소양교육 이수여부 적용

☞ 안전소양교육 이수 시, 시·도교육청에서 가산점 부여

※ 모니터링 결과

- (교원 양성) 안전교육 강화 및 응급처치 등 실습

☞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 교과 등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 강화 또는 과목 신설 (' 16. 3월 입학생~)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교육부

-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 실시 의무화

☞ 전체교원 대상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 개설 운영 (’ 14~ ’ 17)

- 전체교원 대상 7대 안전교육표준안을 적용한 15시간 “안전교육 직무연수과정” 신규 운영
- 사례·실습 중심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초등, 중등교원, 관리자 등 대상에 따라 연수내용 차별화
-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전기안전공사, 교통안전공단, 학교안전공제회 등 전문가 활용 강의

☞ 신규교원 및 자격연수시 안전교육 강화

- 신규교원 연수,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상별로 차별화된 연수프로그램 적용

☞ 학교단위 교원의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활성화

- 초·중등학교 모든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 학교단위에서는 교원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을 매학기별 1회 이상 실시·교육감 보고
- 현장 체험학습, 운동회, 학교 축제 등 각종 행사 전에 반드시 학교장 책임 하에 교원대상 사전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 (교육연수원) 교원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과정 제공

- 집합연수, 원격연수 등 다양한 안전교육관련 연수과정 운영
- 원격교육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 대학부설교육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연수과정 제공

「2015년 교육연수 중점 추진방향」 교육부

- 교원 임용·승진 시 응급구조능력 평가 실시

☞ 교원(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신설 예정인 (가칭) “학교안전관리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임용고사 및 승진 가산점부여 검토

*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구급·재난 관련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면접 등 실시하여 자격부여(국가공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추진 (’ 14. 11월~)

※ 임용고사 : ’ 16. 3월 입학생부터 적용/ 승진 : ’ 15년 규정 개정, ’ 16년 평

정시부터 활용(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협의 후 확정)

☞ 중등 체육교사 선발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 종목 필수 지정
(' 16. 3월 입학생~)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교육

◎ 청소년안전체험 센터 설치·운영

⑦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 및 운영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완료

- 청소년 안전에 특화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
- ☞ 찾아가는 이동식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여건상 안전 체험이 어려운 청소년대상 방문 교육 실시
- ☞ 안전한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 모니터링 결과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설치

한국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 안전지원 센터 출범



▲ 8일 한국청소년진흥원에서 청소년활동 안전센터 개소식 현장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떡을 자르고 있다.

청소년활동을 안전문제를 다루는 전문지원센터가 출범했다. 한국청소년진흥원은 지난 8일 서울 서대문에서 청소년활동을 안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류지열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장, 김선동 한국청소년진흥원이사장, 청소년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활동을 안전센터는 청소년활동 안전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됐다.

이 센터는 청소년, 시설 운영 관련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교육을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컨설팅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활동 안전이 생활화되도록 청소년 대상 안전캠페인, 안전매뉴얼 보급 등 안전 사업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밀고 참여시킬 수 있는 안전한 활동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전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 안전과 관련한 사항들을 여가부, 교육부등과 함께 고민하고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2015년 4월 8일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개소

-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안전관리 기능 총괄 및 수련활동 지원

⑧ 청소년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완료

- 안전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 청소년 특히 저연령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역별 안전 교육 게임을 개발하여 보급함.

☞ 청소년층에게 익숙한 미디어(웹툰, UCC 등)를 활용
ex) 아동청소년 대상 화재테마 게임



- 청소년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칭)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에서 안전과 관련된 체험활동 추진

※ 모니터링 결과

-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서 청소년 활동 안전과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정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 체제 구축

● 가칭 ‘안전누리존(Zone)’ 설치 및 운영 활성화

⑨ 지역별 가칭‘안전누리존(Zone)’지정·운영

<교육부>
<경찰청>

부분
수용

부분
이행

- ‘안전누리존(Zone)’ 지정 기준 마련

- ☞ 청소년의 안전보장 및 적합한 환경제공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 특정구역 지정
- ☞ 주변지역의 교통권, 상권 등을 제한하고 건전한 거리문화를 촉진하여 청소년들의 생활에 보다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복합기능 구역 마련

ex) ‘안전누리존(Zone)’ 지정 기준 예시

- 기준 : 전체 유동인구에 비례하여 청소년 유동인구가 30%를 넘는 구역
- 학교 주변 반경 : 500m
- 청소년 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반경 200m
- 아동 안전 지킴이 업소 : 반경 50m

- 기초자치단체가 ‘안전누리존(Zone)’ 모니터링단 설치

- ☞ 지정된 ‘안전누리존(Zone)’ 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 청소년·부모·교사·경찰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안전누리존(Zone)’ 에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확인하여 조치

※ 모니터링 결과

- 교육부는 국정과제(78-1)로 학생안전지역 지정·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2014.10.), 15년도에는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학생안전지역 통합·지정 안>

개별법	규율내용 (규제지역)	학생안전지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중·고등 학교
학교보건법	유해시설금지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
도로교통법	차량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복지법	CCTV 설치	아동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 법	어린이식품업소 관리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 역

※ 각 개별의 학교(유, 초·등학교) 경계선 200m 이내의 각종 안전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지정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학교 주변 각종안전구역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2014. 9.24)

⑩ ‘안전누리존(Zone)’ 환경 개선

<경찰청> 부분 수용 마이행

- ‘안전누리존(Zone)’ 내 가로등 확충 및 선진화
- ☞ 범죄율과 사고위험이 가로등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자기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의 주 활동장소의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
- ‘안전누리존(Zone)’ 내 법규위반 처벌강화

[참고] 일반도로와 스쿨존 과태료 비교 (경찰청)

위반내용		승용	승합
주정차위반		4만원	5만원
신호,지시 위반		7만원	8만원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원	4만원
	20km/h ~ 40km/h	7만원	8만원
	40km/h ~ 60km/h	10만원	11만원
	60km/h 초과	13만원	14만원

일반도로

위반내용		승용	승합
주정차위반		8만원	9만원
신호,지시 위반		13만원	14만원
속도위반	20km/h 이하	7만원	7만원
	20km/h ~ 40km/h	10만원	11만원
	40km/h ~ 60km/h	13만원	14만원
	60km/h 초과	16만원	17만원

스쿨존

⑪ ‘안전누리존(Zone)’ 내 아동·청소년 지킴이 ²⁾ 제도 강화	<교육부>	부분 수용	이행 완료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아동·청소년 지킴이
 - ☞ ‘안전누리존(Zone)’ 내 순찰 강화 및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귀갓길 친구’ 시스템 활성화
-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 ☞ ‘안전누리존(Zone)’ 내 주류, 담배, 음란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성범죄 특별 가중 처벌
 - ☞ ‘안전누리존(Zone)’ 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가중 처벌 받는 장소로 지정

※ 모니터링결과

- ☞ 학생위험 해소를 위한 학생안전지역 지정·추진(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학생안전지역)
 -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노력
 - 학생안전지역 성과발표회 개최
 -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실시
 - 학생안전지역 시범사업 완료
 -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예정)

출처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059>

-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강화
 - 청소년 유해업소 상시 점검 실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전문 인력지원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SX20150728_0010189542&dID=10805&pID=10800

2) 아동·청소년 지킴이란?

경찰청 내에서 형성된 조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유해한 환경과 불안한 귀갓길에서 청소년을 지켜내는 조직

☞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인터넷 성매매’ 단속 및 처벌 강화 지속 추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지침」 운용실태 점검
- ※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교육과정 이수 명령 시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협조 강화

☞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지침」 이행상황 점검
- ※ 일선 검찰청의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교육과정 이수명령 시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협조, 성매매사범 범죄수익 몰수·추징, 해외성매매 사건 처리·여권발급 제한 등 실적 점검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검사 T/F 운용 및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 사건처리지침 및 사건처리기준 운용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의견수렴 및 문제점 발굴, 제도개선 추진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11011041&code=940301

☞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청 및 일선학교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가족캠프, 사제동행캠프 등 가정·학교 단위 프로그램 운영
- 검찰 및 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의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및 아동양육시설, 지역 아동센터 등 소외·위기 청소년 대상 법 교육 운영 등 지역사회 내 비행예방기능 강화

☞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가정폭력·학교폭력 근절

- 가정폭력·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 및 신속·적극적 사건 처리를 위한 가정폭력·아동학대사건 전담검사·수사관 전문교육

강화

- 가정폭력(다문화가정 포함)·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 점검, 가정폭력·아동학대사건 관련 처리 지침 등 개정 검토
- 일선학교 검사출강 준법교육 활성화 등 학교폭력 방지 및 예방활동 지속 추진
- 청소년·학교폭력 전담검사 T/F 구성, 주요 추진 대책 실태 분석 및 내실화,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로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출처 :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6170291

◎ 청소년안전을 위한 지역사회·학교 연계 협력 강화

⑫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초·중·고등학교 안전 교육 강화

<교육부>

수용

이행
완료

- 지역대학과 연계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 ☞ 소방, 의료 및 간호 등 안전관련 학과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안전교육 실시

※ 모니터링결과

- ☞ 황우여 교육부장관, 수영안전교육 한마당 축제 참석, 학생·교사 등과 함께 ‘안전교육 공동선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1월 19일(수), 경기도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열리는 제 2회 ‘수영안전교육한마당축제’에 참석하였다. ‘수영안전교육한마당축제’는 올해 2회째로 수영안전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호성 오산교육청과 경기도 오산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9월 출범한 국회 ‘안전교육포럼’과 교육부가 함께 주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부는 수영안전교육 컨퍼런스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시상과 수영안전교육 모범사례 발표, 정부교

육 분야 안전종합대책 설명 등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2부는 안전수영 참관, 심폐소생 체험과 안전교육선포식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선포식에는 학생대표, 교사대표, 교육감 대표,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대표 등이 안전교육 공동 선언문을 선포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초, 중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 확산과 수영 및 인명구조, 심폐소생에 관한 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황우여 장관은 선포 선언문을 통해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을 안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는 초, 중등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만이 유일한 길임을 모두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발표
: 교육부는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 (‘14.11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여 2월 26일(목)부터 학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 7대 표준안 : 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사이버/재난/직업/응급처치
이번에 제공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 발달단계(유아~고교)에 맞게 체험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초등에서는 생활안전, 폭력, 신변, 안전 영역을, 고등학교에서는 실습 시 직업안전을 강화하는 등 안전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표준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교육 표준안은 그간 학교 안전교육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4개 교과, 중 6개 교과, 고 5개 교과에서 교육, 유치원 2개 영역(신체운동, 건강, 사회관계)에서 교육. 체험형 교육, 훈련은 연간 5시간 이하가 대부분. 안전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사를 위촉하여 유아에서 고교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 태안군 청소년 재난안전 체험교실

태안군과 한서대, 태안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은 한서대 태안캠퍼스에서 태안지역 초·중·고생 4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실을 운

영한다. 교육일정은 ▲1기 7. 27~28 ▲2기 7. 29~30 ▲3기 7. 31~8. 1 ▲4기 8. 3~4 ▲5기 8. 5~6일이며 각 기별 80명씩 1박2일로 운영되고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선박사고 대피요령 및 탈출 체험, 모터보트 조정체험, B737 비행기 탑승 및 탈출 체험,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작동법, 건물 탈출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지진 체험 등이다. 이에 앞서 3개 기관은 지난달 12일 한서대에서 안전체험교실을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재난안전 체험캠프의 운영을 준비해온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청소년 재난안전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효과적인 안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 발표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시설과 활동 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11. 11(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 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어릴 때부터 안전 의식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전문가로 육성하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활동 제공 및 안전한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천남동서, 포돌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이성형)는 지난 9일 서창동 소재 현진어린이집을 방문 5세부터 7세 어린이 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통학차량 탑승 방법 주의사항을 영상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평소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교통법규 등 교통안전 상식을 배우고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퀴즈를 풀어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성형 서장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교통사고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의 정규속도 준수 등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함께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울산교육청 여름철 안전사고 대책마련

울산시교육청은 여름철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시설물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전반 실태점검과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기숙사 등 교육시설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기상정보 전파 연락망 정비, 식중독 예방 안전점검, 해수욕장과 하천 등 7개 지구 합동 교외지도 등을 진행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유행성 눈병, 식중독 등 예방과 태풍 및 집중호우 행동요령 등 8개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2015년은 재난 및 안전사고 없는 여름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영덕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사고 예방 연수회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성곤)은 지난 9일 학부모, 배움터지킴이, 생활안전담당교사, 교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주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심폐소생술'의 강연과 함께 이륜차(자전거) 안전교육, 어린이 실종, 유괴예방 교육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 교육도 실시해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직원이 책임지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 상주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상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상주교육관에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57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를 했다.



☞ 용지초 안전교육 사례



대구 용지초등학교는 지난달 18일 돌봄 교실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안전생활 실천과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 공동 협력 사업으로써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의 교육기부로 진행됐다.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되어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이었지만 교육기부 강사, 학생들은 전원 입실 전 발열체크와 손 씻기를 통해 메르스에 철저히 대비하며 실시했다. 이날 재난안전교육은 교통안전, 화재상황 대응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학생들은 길을 걸어갈 때, 차를 타고 내릴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듣

고 경각심을 느끼며 주의해서 길을 걸어 다녀야함을 다짐했다. 화재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젖은 수건으로 입, 코를 가린 채 몸을 낮춰서 대피해야 함을 알고 실습을 했다. 또 가정에서 가스누출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듣고 대응방법과 대피요령을 익히는 등 평소 알지 못했던 안전사고 예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⑬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연계망 구축

<여성가족부>

부분
수용 이행
완료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정보 통합 홈페이지 개설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해당 내용은 주무 부처가 관리

※ 모니터링결과

☞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출범, 청소년활동 더욱 안전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4월 8일(수) 오후 2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서울 서대문)에서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안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지난해 7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시행되어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많은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 활동은 인증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 인증 의무화로 2013년도 783건에서 2014년도 1,553건으로 인증 프로그램 증가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다. 17개 시·도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에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수련활동 인증, 신고 업무를 지원토록 하였다. 아울러, 신고 인증 등 안전을 확인한 프로그램의 정보와 시설점검 결과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토록 하여,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이 안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정보를 지역별, 유형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설치된 청소년활동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는 이러한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청소년과 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안전 교육을 지원하고, 수련

활동 현장 점검, 안전관리 컨설팅을 확대·강화한다.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과 평가에도 한국전기, 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협회 등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센터가 참여하여 전문적,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안전이 생활화되도록 청소년 대상 안전캠페인, 안전매뉴얼 보급 등 안전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안전센터는 올해 예산 64억 원이 편성되어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에 설치, 운영되고, 전담인력 28명이 근무하게 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시설안전공단 등 안전관련 기관장, 수련시설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김희정 장관은 청소년들과 함께 핸드프린팅을 하면서 안전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고, 청소년활동안전 홍보 대사로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로보카 폴리’를 위촉한다. 김장관은 “안전한 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꿈과 끼가 실현되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망을 담아 청소년활동안전센터가 출범했다.”면서, “청소년, 학부모가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기의 경험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꿈의 씨앗이 된다. 청소년이 보다 많은 기회를 누리고, 꿈의 창을 넓혀가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그리는 청소년의 내일이다. 청소년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관심과 적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조성

→ 청소년과 부모가 안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 뿐 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도 신고하도록 신고대상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사전에 인증을 받고 활동하여야 한다. 특히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해 청

소년 수련활동 위탁 제한을 두어 법률상 신고 등록 인가 허가를 받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전부 또는 주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과 종합평가를 의무화하여 안전요소가 한층 강화된 청소년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도 대폭 손질

: 7월 1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22일(화)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같은 개정법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하여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인·법인·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련활동 인증을 신청했으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인증 신청 시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유스호스텔의 경우 허가 받은 시설·설비 내에서만 수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평가와 안전점검 의무화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참여율은 75.3%('11년 41.3%), 안전점검 참여율은 95.8%('11년 68.9%)로 참여율이 증가하였으나, 다만, 일부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수련 활동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완료 까지 휴지나 운영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 (종합평가 참여율) '11년 41.3%→'14년 75.3% (안전점검 참여율) '11년 68.9%→ '14년 95.8%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수련활동 계획 시 활용토록 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 결과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관련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 개정으로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안전팀'을 설치하였고,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에 활동신고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군·구의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의 신고·인증 업무를 컨설팅 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종합매뉴얼

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용현 청소년가족 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로 수련활동 안전하게 즐기세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로
수련 활동 안전하게 즐기세요**



01. 청소년들의 안전

지난 1월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신입생 환영회 중이던 학생 9명과 이벤트 직원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체육관에는 560여명의 학생이 모여 있었다. 가장 큰 원인은 체육관의 적설 하중이 30cm에 불과해 60cm 폭설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눈이 굳어지면서 무게가 더 늘어난 것. 건축의 구조적인 문제도 컸지만 평소 안전 수칙만 잘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세월호 침몰 역시 무리한 적재물 탑재와 비용 절감을 위해 적재물을 고정시키지 않은 점. 관제센터가 배의 위치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비상상황에서의 대피훈련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의 부재가 낳은 인재였다. 특히 최근 사고들이 신입생 환영회, 수학여행 등 학교 외부 활동 중 일어난 일로 수련지를 정해야 하는 선생님도 아이를 수련활동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걱정도 늘었다.

02.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에 여성가족부는 보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youth.go.kr>)를 개설해 청소년 수련 장소와 프로그램이 안전한지 인증하는 일부터 기관과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출처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

03. 안전인증프로그램

특히 검색 시, 인증프로그램란을 클릭하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 내에서 원하는 조건을 검색할 수 있다. 아직 지역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 위쪽 메뉴 바에 있는 청소년 활동 란으로 들어간

영기관 찾기를 누르면 기관과 기관의 주소가 나오고 기관을 클릭하면 기관 소개와 교통편, 담당자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호신프로젝트, 진로탐색프로젝트, 청소년환경사랑리폼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은 공공기관과 인증 프로그램, 방학 중 프로그램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다.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인증프로그램’ 란을 선택해 내용을 보면 된다.

▶ 청소년안전 인증 프로그램



(출처 :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혜선(30)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수학여행 폐지 운동이 있었을 정도로 학교 외부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 수학 여행지를 정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학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데 안전인증 받은 곳으로 가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전인증은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를 통해 인증한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공공성

과 유익성, 안전성을 갖춘 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안전과 프로그램의 질을 인증을 하는 제도다. 심사요건으로는 크게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을 본다. 활동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지원운영방안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한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맞는지 등을 평가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유해한 요소가 없는지도 고려한다.

두 번째 평가항목인 지도력은 지도자의 전문성과 지도자의 역할 등을 평가한다. 지도자가 진행하려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은 있는지, 수상레프팅의 경우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해당 활동에서 2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또 안전이나 응급조치를 위한 전담자가 있는지, 활동 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해 대피방법이나 대처방법에 대해 지도를 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국립평창수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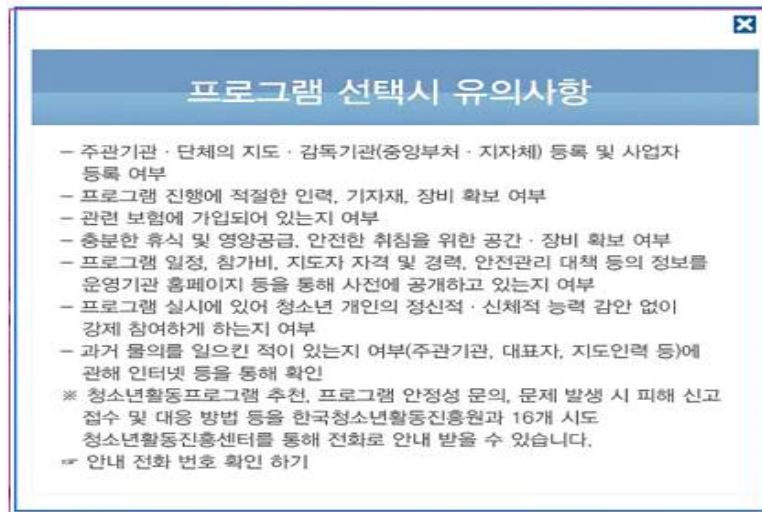
(출처 : 국립평창수련원)

중학생을 키우는 남희영(41)씨는 “씨랜드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건 이후 아이가 수련회를 가면 지내고 있는 곳에 화재는 나지 않을까, 레포츠 활동을 하다 다치는 않을까 늘 불안하다”며 “청소년 수련 기관은 자율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활동환경도 점검한다. 공간의 설비 확보와 관리, 안전관리 계획을 살펴본다. 기관은 수련 활동 장소의 사진과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표를 제출해야하고 수상이나 산악 활동 등을 할 경우 안정장비 점검 결과와 점검 계획서도 증빙해야 한다. 활동 장소를 비롯해 수련 프로그램과 지도자의 안전관리 능력까지 꼼꼼하게 평가해 인증하기 때문에 인증기관이라면 ‘안전’에 합격점을 받았다고 보면 된다. 프로그램이나 기관 검색을 이용할 때마다 팝업으로 ‘프로그램이나 기관을 선정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나오는데, 유의사항도 꼼꼼히 살펴보면 선택에 도움이 된다.

04. 프로그램 선택 시 유의사항

▶ 프로그램 선택시 유의사항



(출처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

초등학교 교사 민혜승(36)씨는 지난 봄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특별활동을 다녀왔다. 민혜승씨는 “기관을 검색할 때 ‘프로그램 선택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봤지만 개별학교나 교사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내용도 많고 한계도 있었다.”며 “안전인증과 더불어 안전 관련 보험에 가

입되어 있는지, 과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등 유의사항을 기관차원에서 검증해 정보를 공개했으면 더 좋을 것” 이라고 전했다.

또 아동 숙박형 신고프로그램을 도입해 수련활동이 예정된 단체에서 학교명과 기간 등을 표기해 등록,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위치와 활동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프로그램의 안전성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신고도 가능하다.

출처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864><http://webzine.mogef.go.kr/201407/subpages/s14.html>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414>

www.youth.go.kr, www.pnyc.or.

3 권익증진을 통한 안전 환경 조성

□ 청소년 근로안전 증진

● 청소년 근로환경 신고 및 점검 시스템 강화

⑭ 청소년근로계약 의무사항 이행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부분	이행
	<여성가족부>	수용	완료

- 청소년 근로감독관 기능강화

☞ 청소년들이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근로계약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근로감독관의 기능 강화

※ 모니터링 결과

- 고용노동부 2015년 2월 23일에 보도된 ‘2015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청소년에 대한 기초고용질서 위반사례의 언급되어 있고 청소년, 여성·외국인·장애인·다수고용 사업장 8650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보

아 고용부에서도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에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따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광역근로감독관’ 설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하고 IT기술을 이용해 감독업무의 정보화 과학화를 추진하여 기획 감독에 더욱 힘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www.safetyculture.or.kr/bbs/board.php?bo_table=sub3_1&wr_id=105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163건 적발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및 경찰과 합동점검 결과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12월 17일(수)부터 22일(화)까지 기간 중 4일 동안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월 8일(목) 밝혔다.

□ 고용부는 노동시장 내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지급,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확립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취약 사업장 근로감독 지도활동**을 전개 중

* (법률 정비) ▲ 최저임금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14.12월 국회 제출)
▲ 근로기준법: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부가금 청구 등('15.2.17. 국무회의)

** (근로 감독) '14년 청소년, 여성·외국인·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16,982개소 감독
→ 8,660개소 시정조치, 210개소 사법처리, 1,488개소 과태료 부과

□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기초고용질서 위반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 '14년말 기준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3천억 상회, 체불 근로자수는 293천명

* 열정페이 논란(인턴·견습생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 등

이번 합동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63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16.6%), 최저임금 미고지 20건(12.2%), 임금체불 3건(1.8%),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43건(26.4%)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36.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25곳(29.4%), 편의점 10곳(11.8%), 패스트푸드점 7곳(8.2%), 제과점 4곳(4.7%)이 적발되었고 의류판매점, 영화관, 미용실, 화장품판매점 등도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4.8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하여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백만 원 이하)를 ‘즉시’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

(적발 시 14일 이내 시정→ 즉시 과태료 부과)하였고,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벌칙규정을 ‘과태료(2천만원 이하) 즉시 부과’로 개선하고, 단순노무종사자(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4.12.31.)하였다.

여성가족부 정은혜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하여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5284>

⑮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근로권리 정보제공 <고용노동부> 수용 이행 완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소년 카테고리 신설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청소년 카테고리를 개설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보 제공
- 민간 고용 알선 사이트에 청소년근로권리 정보제공 의무화

※ 모니터링 결과

-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근로 권리 정보



알바생의 12월 1일~12월 2015 최저임금

시급 5,580 원

* 주 5일 근무 기준

일급	8시간	44,640원
주급	40시간	223,200원
월급	209시간	1,166,220원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알바몬(albamon.c...) × 행복찬 상상 : 네이... × 제11기 대구광역시... × 에세이 : 지식백과 × 알바정준 - 1위

7&page=

알바관련법규

2015년 최저임금 안내 : 시급 5,580원

개정·재정일 : 2014-08-04

댓글 2 | 조회 9,941

2015년 최저임금 안내

2015. 1. 1 ~ 2015. 12. 31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적용

최저임금액

업종	시간급
모든 산업	5,580원

10% 감액적용 가능 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재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할 수 없음

적용 제외자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호 등),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사용자의 의무

1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2 주지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바몬 - 청소년 채용관을 따로 운영 중이며 ‘청소년 채용정보’, ‘청소년 알바알기’, ‘입사지원 도우미’, ‘청소년 희망콘서트’ 라는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청소년 알바 알기’라는 항목에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문답풀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청소년이 궁금해 할만한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식들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 알바 바로알기 10’ 이라는 항목에서도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상식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노동관계 법규 및 상식’ 이라는 항목에선 근로자들이 궁금해 하는 법규들을 설명해 놓았다.

알바천국 -청소년 채용관

* 청소년채용정보

관리자가 직접 검수하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무해도 안전한 공고만을 모아 제공

* 청소년 알바알기

1.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문답풀이 청소년 맞춤형 웹툰
2. 청소년 알바 바로알기 10 :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계신 청소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3. 노동관계 법규 및 상식 : 노동관계법규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상식

벼룩시장 - 청소년 보호 정책 제공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 수립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정보 통신 업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청소년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그 밖에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청소년 알바 대표사이트 : 알바몬, 알바천국, 벼룩시장, 잡코리아 등등

⑩ 청소년근로신고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완료

- 알바신고센터 등 학교 내 청소년근로신고센터 확충

☞ 학교에 배치된 전담교사가 수집된 피해사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고 관서는 전담감독관을 지정하여 센터와 연계해 피해 구제 등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근로신고센터 설치 확대

☞ 시군구 별로 설치되어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하며, 청소년근로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교외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결과

-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운영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co.kr/> ↑)

기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을 통해 근로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많은 청소년근로자[알바생]들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 정확한 신고방법과 해결절차를 몰라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개설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게시판, 콜 상담(1633-3119), 카카오톡 상담(ID:청소년근로권익센터)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만15세~만25세]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무료상담, 권리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NGO 활동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상담팀을 위탁 운영하여 청소년근로 상담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일자리(사)’에서 청소년알바피해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관련 홍보강화

⑰ 청소년대상 근로 인권교육 강화

<교육부>		
<고용노동부>	수용	이행
<여성가족부>		완료

- 청소년근로 인권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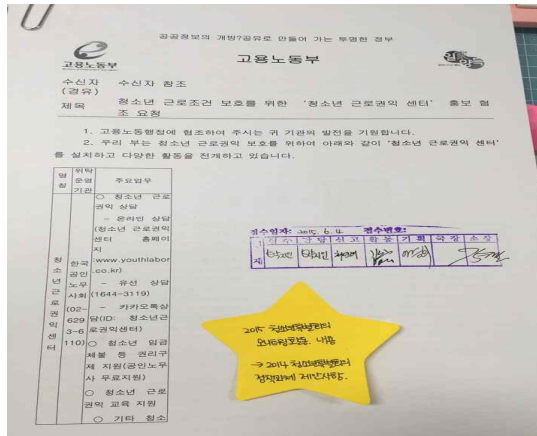
☞ 전국 중·고등학교에 배치될 진로진학상담교사로 하여금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통해 노동관계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교내 청소년 근로 교육활성화(최소 학기 당 1회 이상)

※ 모니터링 결과

- 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한 근로권익센터 설치

☞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실현을 위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주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의 길이 열려있고, 전화나 카카오톡을 활용한 상담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기본으로 하여 지켜지지 않았을 시 무료로 법적 권리구제를 도와주기도 한다. 이에 더불어 알바지킴이라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의 알바

지킴이 공인 노무사와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

- ① 학생 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 마련 및 학생인권교육 교단지원단 운영
- ▶ 부산시교육청은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 노동인권교육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5월 중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지방노동청 등 유권기관과 연계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오는 7~8월에 학생인권교육 교단지원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학교 내 인권 친화적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8개교에 설치되어 있는 안심알바 신고센터도 전체 중·고교로 확대 설치, 운영하고 노동인권 상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직업과 진로, 사회, 도덕·윤리 등 교과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많이 하는 방학 때는 1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2월 모든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부장을 대상으로 학생생활지도계획 연수를 실시하고, 부산교육연수원이 운영하는 교원자격(직무)연수 에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노동 권리와 노동권리 침해 시 구제 방법 등을 담은 팸플릿도 만들어 배부할 예정이다. 현재 계획 중인 단계에 있으며 추진되고 있는 진행 상황은 없는 것 같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

-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쉼터 등 근로인권 교육프로그램 확대

※ 모니터링 결과

- 영암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시

☞ 전남 영암군은 청소년 근로보호 지원 사업 중 사업주 대상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가졌다. 3월 30일 영암읍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교육에는 관내 외식업 종사 사업주 약 400여명이 참석, 관심 깊게 교육에 임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법 등 청소년 근로보호에 관한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과 상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보호에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보장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법규를 준수하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3월 3일에는 홍보활동을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관내 14세 이상 청소년들을 선발해 근로보호지킴이 청소년 활동단 위촉 및 발대식도 가졌다.

출처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772>

- 근로조건 기준 교육을 모든 청소년에게 실시토록 하는 법안 발의

☞ 현행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이 시책과 관련해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안을 단순히 발의한 수준에서 그쳤고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더욱 적극적인 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 같다.

출처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41717217638037>

⑩ 연소자근로관련법 및 정책 홍보강화

<고용노동부>	부분	이행
<여성가족부>	수용	완료

- 연소자근로관련법 홍보 및 우수사례 보급

☞ 매체를 통한 연소자 근로기준법 홍보

☞ 연소자근로관련법 준수 우수사례 수기대회 실시

☞ 연소자근로관련법 준수 사업장 인증제 도입

- 청소년근로관련 정책 홍보강화

☞ #1388, 청소년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제도 등 청소년근로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 모니터링 결과

연소자근로관련 법 및 정책 홍보강화

황여정 연구위원이 2014년 6~7월 중3~고3 청소년 총 4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13.2%, 고등학생 28.9%, 일반고 26.1%, 특목고·자율고 15.4% 등 중고등학생의 25%는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고, 특성화고등학생은 절반이 넘는 52.5%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하는 부당처우 중에는 임금 체불이나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처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했다. 연소자 근로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는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보호구제 장치인 안심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는 20%수준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은 25.5%에 불과했고, 부모동의서 제출 비율 36.9%,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비율 20.7%수준에 머물렀다.

→ 2015년 3월 12일 서울신문 자정고에 실린 기사 중 일부이다. 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연소자근로관련 법에 대한 인식은 늘었으나 권리보호구제 장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정책으로부터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신문 자정보 <http://www.moel.go.kr/policyinfo/youth/main.jsp>

→ 고용노동부의 연소근로자 정보 페이지 주소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연소자근로보호내용과 관련해 연소자근로보호의 의의, 근로계약, 임금청구, 근로시간, 금지직종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윗글의 내용과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국가에서 청소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 보인다.



정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도움기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자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청소년 권리증진

●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기회보장

⑪ 청소년의 참여로 구성·운영하는 여가 공간
‘새참’³⁾ 운영

<여성가족부> 수용 미이행

- 기존 청소년시설 유휴 공간을 ‘새참’으로 활용

☞ 기존 청소년시설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개선하여 청소년 놀이 공간 조성

-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 ‘새참’ 신규로 신설

☞ 지역사회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참’을 신설하여 접근성 강화

※ 모니터링 결과

☞ 여가공간 ‘새참’의 운영되지 않았으며 추진현황도 없었다.

유선으로도 확인했지만 담당자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⑫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어울림마당
활성화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완료

- 동아리활동 지원 확대

☞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과 지역사회의 자원 개방

☞ 동아리활동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동아리를 발굴·지원

3) 새참은 ‘새로운 청소년참여 문화 공간’으로 기존에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들었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 문화 공간이다.

- 청소년어울림마당 활성화

- ☞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울림마당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 많은 청소년들이 어울림마당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 ☞ 기존 어울림마당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구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 모니터링 결과

-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4년도 대비 15년도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예산증가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비고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384	584	200 ▲

출처 : 2014년도 여성가족부 사업설명자료(요약본)

201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개요

⑫ 농어촌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완료

- 농어촌청소년 문화활동 인프라 확대

- ☞ 농어촌 지역에 청소년수련원(관)을 신설할 때 시내의 중심부에 지음으로써 농어촌 청소년들의 참여기회 확대
- ☞ 이동형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농어촌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 확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이 농·어·산촌 찾아간다 .

‘문화’를 실은 버스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주성혜)과 함께 오는 9월부터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평소에 문화예

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현장을 예술가가 직접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문화예술교육 체험공간으로 내·외부를 개조한 3대의 ‘예술버스’가 강원·충청·경상·전라 내륙지역의 경로당, 분교, 아동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등 예술버스가 방문한 지역의 주민들은 이색적으로 꾸며진 예술버스 안에서 예술가들과 함께 미술, 공예,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남지역의 섬마을 주민들도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을 접해볼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전남도청이 섬마을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병원선(船)과 연계해 마음의 건강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섬마을 주민회관 등에서 예술가들과 함께하게 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어른들은 농번기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업은 ‘국민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이루어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국정과제 추진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지역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올해 말까지 130회 운영될 예정이며, 아채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은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은 9월 30일까지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누리집(<http://artebus.art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2398672>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㉔ 문화누리카드 편의성 증대

<문화체육관광부>

부분
수용 이행
완료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범위 다양화
 - ☞ 전국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통일화하고 사용범위 확대
 - ☞ 전국 가맹점 목록을 문화누리 홈페이지 게시 안내하고, 가맹점 스티커 부착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 문화누리카드를 모바일 앱카드로 제작 및 보급

※ 모니터링 결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문화누리' (Munhwa Nuri) websit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로그인' (Login), '회원가입' (Sign Up), and ' 사이트맵 ' (Sitemap).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veral main sections:

- 로그인 (Login):** Includes a login form with '아이디 로그인' (ID Login) and '공인인증서 로그인' (Public Certificate Login) options. There are also icons for '잔액 확인' (Check Balance), '발급 현황' (Issuance Status), and '사용 현황' (Usage Status).
- 문화누리카드 (Munhwa Nuri Card):** A central section with five icons: '문화누리카드란?' (What is Munhwa Nuri Card?), '카드신청' (Apply for Card), '사용현황' (Usage Status), '오프라인 사용처' (Offline Usage), and '수령등록' (Receipt Registration). The '오프라인 사용처' ic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 온라인 사용처 (Online Usage):** A section with icons for '도서, 음반' (Books, Music) and '공연, 영화' (Performances, Movies).
- 나눔티켓-공연정보 (Nanum Ticket - Performance Information):** A section featuring posters for 'Miserables' and '윤종신 콘서트' (Yoon Jong-shin Concert).

On the left side, there are sections for '공지사항' (Notice) and '이벤트' (Event).

출처 : <https://www.munhwanuricard.kr>

② 문화누리카드 대상 및 서비스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부분
수용부분
이행

-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 현재 대상 연령은 만 6세~19세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이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확대하여 사용자들이 생활의 질을 높임.

※ 모니터링결과

2014년 청소년특별회의 세부정책과제인 문화누리카드 편의성 증대 및 대상, 서비스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만 반영 된 것으로 나타남.

- 문화누리카드가 2014년에 비해 달라진 점 & 현황(전국)

구 분	2014년	2015년
사업편성	· 카드사업 - 기획사업 = 75% : 25%	· 카드사업 우선 추진 후, 기획사업 추진(발급률, 지역별 특성 감안)
지원기준	· 세대 당 10만원 ·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발급	· 개인 당 5만원 - 6세 이상(2009.12.31.이전 출생자)
발급기준	· 선착순 카드 발급(예산범위 내)	· 신청자 전원 발급(발급기간 내)
발급기간	· '14.2.24.~12.31. · 전국 온/오프라인 동시발급	· 오프라인 발급 : '15.2.13.~4.30. · 온라인 발급 : '15.3.9.~4.30.
이용기간	· '14.2.24.~12.31.	· '15.2.13.~'15.11.30.
발급방식	· 신청 즉시 발급	·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 6.30.까지 미수령시 익년도 발급제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개인 : 신분증 확인만 필요 (사본 보관 불필요) · 시설 : 대표자 및 발급자 신분증 사본 제출 및 보관 필요
중복수혜방지	· 제한조치 없음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 중복 수혜 제한
제한조치	· 제한조치 없음	· 전액미사용자, 카드미수령자 익년도 발급 제한 공시·실시

별첨1. 충청남도 현황

1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Q : 2014년과 비교하여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증가 하였는지?

A : 89,191명(2014년) → 95,430명(2015년)

* 전년도 9월 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를 통해 대상자수 결정

Q :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문화누리카드 예산이 14년과 비교하여 15년 예산이 증가 되었는지?

(지방정부 예산도 포함한 예산)

A : 2014년 2,991,000천원(국비2,157,000+지방비 834,000)

→ 2015년 3,181,700천원(국비2,272,700+지방비909,000)

Q : 13년~15년현재까지 발급된 카드수 및 증가/감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수	27,394	27,050	39,632
증감	-	△344	12,582

2

서비스관련

Q : 1가구당 지원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 서비스 확대가 아닌 서비스 저하가 아닌지?

A : 기존 세대카드(10만원)에서 개인카드(5만원)으로 변경되어 표면적 금액은 줄었으나 세대원이 많은 대상의 경우 실질적 수혜금액은 증가

Q : 각세대에 맞는 서비스가 운영중인지

A : 그렇지 못함(사업주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

Q : 각세대에 맞는 서비스가 세대별로 맞게 안내되고 있는지

A : 그렇지 못함(사업주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

3

부서/도의 역할

Q : 문화누리카드편의성 증대를 위해 어떻게/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해왔다면 운영성과는 있는지

A : 가맹점 신규 발굴·등록 및 일선 현장의 읍면동 담당자 개선·건의사항 등 의견을 중앙에 건의하여 시스템 개선 부분엔 성과가 있으나 카드 이용 확대 부분에선 반영이 잘 되지 않거나 느리게 진행

Q : 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맹점에게 제공되고 있는 혜택은 있는지?

A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홍보
 - 2014년 : 책자 제작, (주민센터 비치용)
 - 2015년 : 리플렛 제작, (이용자 배포용)

Q : 문화누리카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어떻게/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해왔다면 운영성과는 있는지

A :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및 이용 독려, 가맹점 발굴, 불편사항 중앙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4

가맹점 관련

Q :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확대되었는지 (14 V s 15)

A : - 확대분야 : 철도
 - 가맹점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가맹점 수(개)	3,880	3,057

5

카드 남은금액 활용

Q : 카드사용기간이 끝난 남은금액은 14년도 얼마이며,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A : 발급잔액 : 37,309천원, 활용방법 : 반납예정

별첨2. 인터넷 신문기사

1. '문화향유 기회 확대'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신청자 전원에 발급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오는 30일 마감된다. 올해에는 신청자 전원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개인별 연간 5만원을 지원 중이다. 대상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 강릉 문화누리카드 혜택 축소

강원도민일보-구정민 기자 =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되면서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제공받는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제공 기준 및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신청자 모두에게 개인별로 연간 5만원 한도의 카드를 지급키로 했다. 기존의 '가구별 카드' (연간 10만원)와 대상 가구 내 청소년 5명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청소년 카드' (1인당 연간 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개인카드' (연간 5만원) 등을 올해부터 모두 없애고, 개인별 카드로 단일화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선착순으로 제공하던 카드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문화누리카드 수혜폭이 크게 확대될 것 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예전에는 가구별로 연간 10만원과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모두 2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가족 구성원 수(3명)에 따라 15만원으로 지원액이 축소되는 등 가족 구성원 수가 적은 수급자들은 혜택이 오히려 축소된 상황이다.

또 정부는 신청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올해 강릉시의 관련 예산은 국비(3억1100만원·70%)를 포함해 모두 4억4100만원으로, 지역 내 전체 대상자(1만 4574명)의 60% 수준인 8820명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가족 구성원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혜택이 축소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내 달 말까지 문화누리카드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10일 현재 전체 예상 인원(8820명)의 절반인 4983명에게 카드가 발급됐다”며 “앞으로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정부에 관련 예산을 추가 요청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 '문화누리카드' 발급 확대… 문화부, 개인별로 5만원 지급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문화누리카드'가 올해부터

는 신청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들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문화부는 4일 “선착순 방식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화 소외계층을 줄이고, 카드 발급 희망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 모두에게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며 “9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순차적으로 발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카드 신청 기간은 4월 말까지 3개월간이며, 이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 부터 11월30일까지다.

지원 기준도 지난해 세대별 10만원에서 개인별 5만원으로 변경된다. 개인별 문화향유의 선호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처럼 세대별 단일 카드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합산 신청도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와 공연·전시 관람, 숙박, 여행,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 이용 가능하며, 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www.나눔티켓.or.kr)을 통한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실제 발급 신청자들의 수요를 감안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재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4. ‘문화누리카드’ 홍보 부족 찬밥신세… ‘소외계층’ 외면한 ‘소외카드’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누리카드가 되레 소외받고 있다. 발급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발급률은 50~80%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개인별 연간 5만 원을 지원해 공연·영화·전시·도서·음반 등의 구입, 관광시설 입장료 및 국내항공권, 철도·여객선·고속버스 승차권, 야구·농구·축구·배구 등의 스포츠경기 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청소년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1인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최대 35만 원을 혜택받는 통합문화이용권이다.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신청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올해는 홍보 부족 등으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인천지역 문화누리카드 발급현황(4월 14일 기준)을 보면 전체 발급대상자 8만 4천692명 중 5만 8천989명만 발급받아 발급률이 69.65%에 그쳤다. 발급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고작 4일 남은 상황이다. 특히 동구는 발급대상자 2천778명 중 1천468명만 발급받아 발급률이 52.84%로 가장 낮았으며, 강화군 53.46%, 중구 54.27%, 남구 62.89%, 연수구 66.38%, 남동구 69.01%, 옹진군 70.53%, 계양구 70.78%, 서구 76.69%, 부평구 78.43% 순이다. 인천시는 일단 홍보가 부족해 발급률이 낮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누리카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로 볼 수 있는 공연·전시 등을 알려주는 나눔티켓 홈페이지(nanumticket.or.kr)를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무료공연이나 할인공연은 연간 5~10개뿐이고 전시회는 아예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각 군·구가 직접 홍보에 나서 발급률을 85%까지 높이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15.04.27, 김미경기자, 경기일보

□ 청소년참여활동 강화

● 청소년참여기구 내실화

②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질적 내실화

<여성가족부>

부분
수용 이행
완료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체계화 및 내실화

☞ 활동내용 전반과 우수사례가 담긴 운영매뉴얼 제작을 통해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체계화

-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 선택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참여기구 유경험자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네트워크 조직 구축을 통해 현 청소년참여기구의 참여활동을 지원

※ 모니터링 결과

-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대사 위촉

☞ 여성가족부에 직접 문의 전화를 드린 결과 현재 홍보대사는 없으며 홍보대사라는 한 명의 인물을 형식적으로 위치시켜놓는 것이 아닌 청소년특별회의의 각 지역별 대변인 선발이나 온라인홍보청소년이라는 활동 등으로 대체하였다고 답변을 받음. 현재 형식적이고 이름뿐일 수 있는 홍보대사보다 실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그 과정에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출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에 문의 및 인터넷 자료조사

-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별 및 사례홍보 및 정보공유

- ☞ 우수 청소년 위원회는 3월~6월까지 선정하여 8월 즈음 시상함. 작년도도 시행하였고 올해 우수 청소년 운영위원회 선정 완료함. 우수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 시설 포털에서 확인 가능함. 현재 계획은 9월 달에 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며 워크숍에서 정보공유, 사례홍보를 할 예정임.

출처 : 여성가족부 활동진흥과(02-2100-6260)



연도	시설명	지역(광역시/도)	시설종류
2014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경기도	청소년 수련관
2014	과천시청소년수련관	경기도	청소년 수련관
2014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경상남도	청소년 문화의집
2014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강원도	청소년 문화의집
2014	가평청소년문화의집	인강광역시	청소년 문화의집
2014	산울청소년문화센터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의집
2014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경기도	청소년 수련관
2014	서울특별시과곡문화센터	서울특별시	청소년 수련관
2014	광주시청소년수련관	강원도	청소년 수련관
2014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경기도	청소년 수련관

- 매년 전국 청소년 운영위원회 대표 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운영위원회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2015년)

-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9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2014년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아르피나유스호텔 (부산 소재)에서 개최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운영위원회 대표 250여명이 참여합니다.

워크숍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수련시설 관장과의 101분 토론에 참여하며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국 5개 최우수 운영위원회*는 각기 우수사례를 발표합니다.

특히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들리는 우체통’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수련관 운영에 참여하여 ‘전국에서 가장 작은 수련관’이 최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대표단 워크숍)

출처:여성가족부

㉕ 청소년참여기구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완료

- 청소년참여기구 홍보대사 위촉

☞ 청소년참여기구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 참여기구 홍보

- 청소년참여기구 네트워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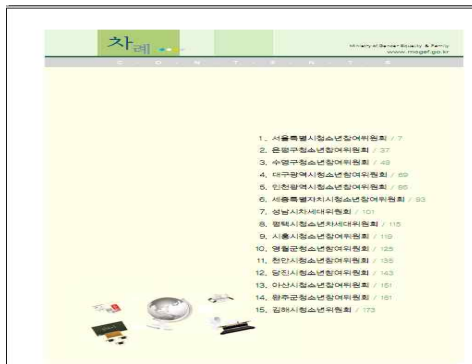
☞ 청소년참여기구 홍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청소년참여기구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함. 국가 기관의 표창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회 참여 유도

☞ 지원 분야를 다양화해서 각 지역 재능 있는 청소년의 참여로 재능을 발굴하고 청소년참여기구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니터링 결과

-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의 체계화 및 내실화

☞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우수사례집은 2013년도부터 시도군구 및 유관기관에 배포 및 홈페이지에 게시중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안내->자료실

-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 모니터링 결과 15년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과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참여포털(<http://www.youth.go.kr>)에 전문가 온라인 강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동영상 강의 및 인쇄를 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업로드 되어있지 않아 교육 대상인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온라인강의가 아닌 현장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자격연수, 보수교육, 전문연수 그리고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연수를 보다 폭넓게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마당의 자료실에 업로드 된 자료는 위의 연수를 위한 PDF 형식의 교재일 뿐, 그 자료를 이용한 자율학습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대전지역 청소년특별회의에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청소년지도자에게도 문의해봤다. ‘청소년참여기구 담당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라는 정책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자료 또한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신속히 위 정책을 정상화하여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온라인상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 참여기구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활동 경험이 있는 선배, 연임 위원 등의 도움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출처: 대전 청소년활동 진흥 센터 청소년참여위원회 지도자)

대전광역시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을 기획 중에 선배위원들을 초청, 선배의 의견 및 조언을 받는다고 한다. 청소년 참여포탈에서 확인한 결과 청소년역대위원 지원단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보임.

●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보장

②⑥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청소년 참여보장

<교육부> 불수용

- 학교 내 각종 위원회의 학생 위원 참여 의무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 대표 학생들을 배심원 배정

☞ 학교 학사 일정 등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필요성이 큰 업무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를 의무화해야함.

② 청소년분야 각종 위원회의 청소년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수용 부분
이행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위원 참여 의무화

☞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청소년육성 관련 시행계획, 시책조정과정
에 청소년위원 참여 확대


※ 모니터링 결과

-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함.

“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여 성 가 족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활성화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및 문서

-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 청소년정책과-3153(2015.8.31.)호 <지자체 청소년 담당부서 및 청소년육성위원회 현황 파악 협조 요청>

2.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지난 9월에 파악한 각 지자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현황(붙임)을 참고하셔서, **미설치된 지역은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주시고, **이미 설치된 지역은 위원회 활성화(연2회 이상)**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16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청소년육성 관련 시행계획 및 시책조정 과정에 수혜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사회참여 기회확대

● 청소년 선거권 확대

②⑧ 교육감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불수용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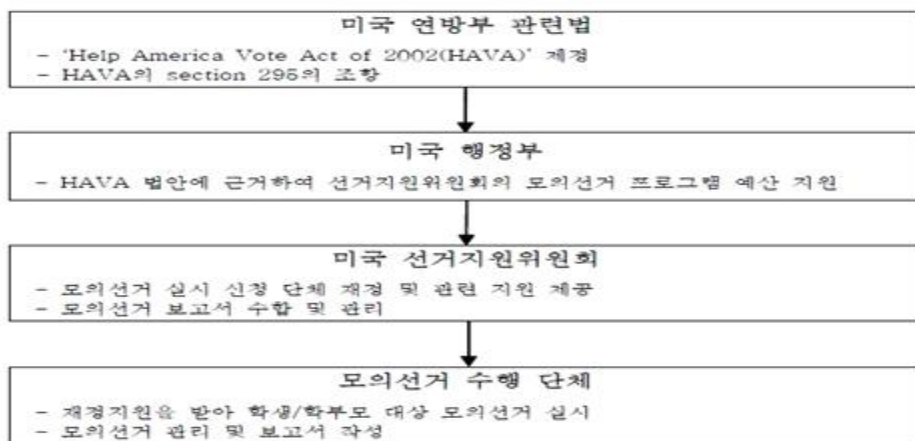
- 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정을 통해 시도 교육감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②⑨ 청소년 모의선거제 도입

수용 **부
이행**

- 청소년모의선거위원회를 조직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 제도 도입



(출처: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Ⅲ): 교육 분야 지원체계 구축방안, 2013)

※ 모니터링 결과

- 14년 정책과제 제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청소년대상 정치캠프를 운영 중이었으며, 각 시·도 단위로 확대하여 운영

출처 : http://www.civicedu.go.kr/web/civilEdu/civilEdu_05.jsp

③ 학교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

부분
수용부분
이행

- 학교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 확대

※ 모니터링 결과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검색 결과 15곳이 업무계획에 민주교육강화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음 (미운영 : 대전, 경북, 전북).

구 분	세부내용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교육부 업무 계획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학교】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체제, 자유·평등 등 주요가치에 대한 이해, 국가·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교육 등 학교 내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주요 업무 계획 실천과제 1-3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1-3-1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 이해 및 자질 함양 ▶ 보편적 인권교육 확대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주요업무 계획 - 발달 단계별로 인성 핵심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급별 핵심 역량과 덕목 실천 (중) 민주시민 자질 함양 (고) 진로개척과 세계시민 자질 함양
대구광역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대구교육의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 고등학생 대상 자유민주시민교육 실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I-2. 소통·협력·자치로 학교폭력 OUT 나. 인권 감수성을 키워주는 학생자치활동 : 민주시민으로서의 소통·참여 역량 강화를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IV-1. 현장중심의 참여 행정

	가. 참여와 자원봉사 중심의 학교자치 : 청소년 자원 봉사를 통한 나눔과 배려의 인성 및 민주 의식 함양
광주광역시 교육청 민주인권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주요업무계획 1-다-1 민주시민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 운영 지원 - 5·18민주화운동 기념주간 운영계획 수립 - 학생참여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 ○ 광주형 민주시민교육과정 개발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교육광역시 교육계획서 - 민주시민 기본생활 실천교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 민주적 학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과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경기 교육 기본계획 33. 민주·평화·세계시민교육 활성화 33-2.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강원도교육청 교육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주요업무계획 1-3.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 성평등 교육 내실화, 평화·생태교육 역량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충청북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계획 1-1.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인권교육 5-1. 따뜻한 품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교육(준법교육 및 리더십교육 포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주요업무계획 14. 학생 참여활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추진 목적 민주시민의식 고취 및 의사결정능력 배양 자율과 참여의 학생 자치문화 조성 나. 추진 방향 및 내용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중심의 특색있는 학교문화 조성 - 자율 참여의 학생회 활동 운영 지원: 40교 민주·창의적인 자치활동 전개 지원: 학생회 운영 지원 등 학생회 회의문화 활성화를 통한 토론능력 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야영·수련활동 지원 소통 중심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학생대표 참관 권장 -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을 통한 자율·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인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경남교육발전계획(2015~2018) - 경남교육 지표와 비전 :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주요업무계획 3-1.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 3-1-1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공동체 구현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③1 청소년 주도 선거공약 제안 및 평가제도 도입 <여성가족부> 수용 이행 완료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하여 각종 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에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확대
- 청소년들의 선거 후보자 청소년정책 공약 모니터링
- ☞ 청소년들이 각 후보자들의 정책제안 점검
- ☞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모니터링하고 평가함.

※ 모니터링 결과

- ‘15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침에 선거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공약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추가 반영

바. 운영

○ 활동내용

- ①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평가
 - 청소년관련 정책 및 지역사회 내 현안 문제를 인식, 안건으로 논의
 -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예) 참여기구 연합행사 프로그램 제안, 연합행사 부스 평가 등
- ②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관련 정책 제안 및 건의, 성과 점검 등
 - 지역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추진, ‘정책 제안서’ 제출
 -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성과 점검, 정책의 추진·이행상황 모니터링

• 각종 선거 후보자의 청소년 정책관련 공약에 대한 제안·점검 확대

자. 협조사항

○ 지역 내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설치 확대

–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설치 시군구에 대해 우선 지자체 자체적으로 설치 추진 강화

* '14년 12월말 기준 서울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위원회가 자체 운영 중(현재 국고 미지원 상태로 예산확보 시 위원회 설립연월일순으로 순차적 지원 예정)

– 현재의 참여위원회 외에 지자체 자율적으로 청소년위원회 추가 운영
(예, 기획위원회, 축제위원회 등)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하여 각종 선거 후보자 정책공약에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 확대

– 청소년정책 공약 이행 여부 및 전년도 제안과제 반영 여부 모니터링 등

자료집발간번호 KYWA-2015-081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인 쇄 : 2015. 12.

발 행 : 2015. 12.

발행인 : 김 석 병

발행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20-732)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충정로 2가) 진양빌딩 5층

전화 / 02-330-2800(代)

팩스 / 02-2075-0914

인쇄처 : 디자인인 02-783-8582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